

2018
국정감사
백서
LIBERTY KOREA PARTY

2018 국정감사 백서

발 / 간 / 사

2018년 국정감사 일정이 어느새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쉴 새 없이 대어투쟁 선봉에 섰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국정감사를 「경제살리기·나라지키기 국감」으로 하고,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 등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나타난 실정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감사 전 급히 임명되어 현안파악에 급급한 여러 장관들, 국정감사 기간에 부적합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당당히 정부의 마리오네트가 되길 자초한 여당은 방패국감의 전형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여당의 비호를 받은 정부는 국정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심폐소생 시키려 속임수를 쓰고, 수치에만 매몰되어 고용지표를 조작하기 위해 단기 가짜 일자리를 양산했습니다.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제대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돈보기를 자처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가치를 당당히 증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국회 패싱’ 셀프 비준에 대해 절차적,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원전 조기 폐쇄로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이 받고 있음을 알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등 각종 경제실정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작태에 쓴소리는 거침없었고, 대안 제시는 명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국민주권 및 헌법수호가 최우선으로 지켜지도록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감감히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쫓으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결과가 실망스러우면 과정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만한 정부의 독단적이고 오락가락 국정 운영에 일침을 가하는 자유한국당의 고언을 정부는 새겨듣기 바랍니다.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함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국정감사를 준비한 국회의원, 보좌진, 당 정책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에게 깊은 동지애를 느낍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국정백서가 혼란한 정국의 망망대해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부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함진규**

차례 Contents

법제사법위원회	5
정무위원회	13
기획재정위원회	22
교육위원회	3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0
외교통일위원회	48
국방위원회	57
행정안전위원회	6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9
보건복지위원회	101
환경노동위원회	110
국토교통위원회	116
여성가족위원회	129

2018
국정감사
백서
LIBERTY KOREA PARTY

2018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헌 정권의 위헌적·위법적·탈법적 국정운영에 대해 지적
 -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비준에 대한 위헌, 위법성 문제
 -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
 - 감사원 태양열 사업 감사 자제 발표에 대한 부당성
 -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에 따른 엄청난 국고 손실
-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철저한 수사 촉구
 -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촉구,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부정사용 관련 수사 확대를 촉구
 - 그 외 현 정부인사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 촉구
- 사법부의 정치화 비판 및 민생을 위한 공권력 사용을 촉구

✓ 평가

-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대해 경종을 울림
 - 특히 법제처의 ‘정권 편의주의적’,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 것은 가장 큰 성과라 할 만함
- 여당의 정부 대변하기, 증인 감싸기 등 국감 방해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여당의 증인 감싸기, 국감 방해 행태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함으로써 ‘행정부의 일탈을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

여상규 의원실

文정부 방산외교 실패… 17조 원 美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날려

주요내용

| 감사원과 검찰 앞세워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적폐로 내몰아… 수주戰 힘도 못써

- 문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부풀리기식 감사결과 발표(2017.7.16.)로 세계에서 11번째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수리온을 불량헬기로 둔갑시켜 인도네시아 등 5조 원에 달하는 수출 협상을 물거품으로 만들.
- 2017.7.17. 문 대통령의 방산비리 엄단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검찰수사 착수, 공언했던 방산비리가 밝혀지지 않자 채용 비리와 회계 부정 등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로 KAI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거 기소, KAI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등 한창 진행 중이던 美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수주戰에 찬물 끼얹는 자해행위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킴.

| 감사원, 방산비리 검찰수사 의뢰사건 대부분 ‘무혐의’로 밝혀져

- 감사원이 2015~2017년 기간 동안 검찰에 수사 의뢰한 총 3건의 사건 중 2건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나머지 한 건은 개인 비리에 불과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리온 개발투자보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KAI가 승소, 법원은 “국가는 KAI에 지급을 거절한 금액 등 378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초래

| 북핵 관련 한미동맹 균열…해외수주 실패로 귀결

- 美APT,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원전 등 대형해외프로젝트 모두 무산 위기로 내몰아 文정부 외교 무능으로 국내 핵심산업 수출산업화에 악영향 끼쳐

김도읍 의원실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김도읍 의원 2018국감 주요활동

주요내용

|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등 전·현직 지방법원장 및 법관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으로 사용, 비자금성,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비자금성, 쌈짓돈처럼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사용.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폐지, 檢 수사확대, 감사원 감사요구

| (법무부) 문재인 대통령, 제주 강정마을 불법 시위자 사면복권 발언 관련 지적

- 불법시위꾼들의 제주강정마을 민군복합항 건설 방해로 840억 원의 공사지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준 것도 모자라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 (대검찰청) 탈원전 정책 관련 고발 사건 수사력 축소 문제 지적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죄 혐의에 대한 관계자 고발을 의도적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으로 분산시켜 수사 방해 시도 차단

| (대법원)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 사법부 정치화, 사조직화 관련 지적

- 김선수 대법관 임명 강행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코드인사 문제점 지적 및 이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정치화, 사조직화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

| (대검찰청·군사법원) 문재인 정부, <9.19.군사분야합의서> 위헌 및 법률위반 사항 지적 및 안보 문제점 지적

- 군사분야합의서의 위헌 소지 및 법률위반(형법 제99조 이적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촉구 → 검찰, 검토하겠다고 밝힘)사항 지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지적 및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안보 저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국정원) 국가핵심기술 및 주요산업기술 유출 중국으로 유출 심각!

- 산업스파이 등 국가핵심기술과 주요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중국으로 유출 심각한 실정.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법제처) 문 대통령의 감사원 독립성 훼손 지적

- 감사원,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사업에 대해 1년간 감사 자제 방침’을 발표하며, 정권 관심사항 이자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태양광 발전산업>을 감사 자제 대상에 포함시킴. 대상 선정 배경에 대통령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 지적하며, 대통령의 감사원 독립성 훼손 질타

이완영 의원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시정해야

주요내용

|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 수사 관행 개선 촉구!

- 검찰의 영장기각 사유 공개 등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빈번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는 없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과도한 심야 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 관행도 질타함.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시정 검토 지시를 내렸으며, 지휘·감독 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함.

| 법원 가려면 6시간 걸려, 경북북부지법 신설 필요

- ‘대구지방법원’ 담당 인구는 대구·경북 516만 명, 면적도 수도권 다음으로 넓으나, 지방법원은 서울고법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 각 3개, 대전고법 2개에 비해 대구고법에는 1개뿐인 점을 지적함.
-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으로 경북북부지역 사법수요가 증가하였고, 과거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 후 창원지법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경북북부지법 신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함.

|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노후화 및 교정공무원 업무 과중 지적

- 국내 교정시설의 83%가 과밀수용, 건축 30년 이상 노후화된 곳이 45%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교도소 신축지역에 인센티브 예산을 적극 투입해 줄 것을 주문함. 또한 교정공무원 인력 충원, 교정본부의 교정청 독립,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로 교도소 근무 적극 검토 등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 전국 공기업·공공기관의 가족채용과 우후죽순 태양광, 감사원 감사 필요

-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관련해 감사원에 전국 공기업·공공기관 전반의 가족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함.
- 우후죽순 태양광 사업으로 보조금 특혜, 한전 업무비리, 산지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주장함.

이은재 의원실

‘국민 위한다’는 정부의 부처들,
‘자기 몫 챙기기’와 ‘눈치보기’ 일관

주요내용

| 법무부 탈검찰화가 민변 내 자리다툼으로 변질

-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탈검찰화를 핑계로 법무부 요직에 민변 출신들로 채우고 있음.
- 최근 민변 출신 법무부 간부가 임기 중인 검찰관 사퇴를 종용하고, 또 다른 민변 출신 간부는 검찰관 채용에 공모한 민변 변호사를 찾아가 포기를 종용. 법무부 자리를 두고 민변 내 다툼으로 본격화

| 감사원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제도 개선 촉구

- 감사모범사례로 타 부처 공무원 40여 명을 선발해 감사원 예산으로 매년 공무국외여행 프로그램 진행
- 여행 일정 대부분이 패키지관광이고 관련기관 방문 및 간담회 시간은 평균 4시간이 채 안되며, 결과보고서 역시 기존 보고서 짜깁기 수준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 국외여행을 감사해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의 국외 여행은 부실 운영

| 대법원 사법부 독립 위한 노력보다는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

- 사법농단 의혹 처리 관련, 진정한 사법부 독립의 의지를 확고히 세우기보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동조함으로써 사법부 내외의 비판 초래
- 재판결과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의 사면 발언으로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조성되었지만, 정작 사법부의 논평 한마디 없는 현 상황을 질타
- 전임 사법부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공보관실 운영비」나 「공관 리모델링 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집행

| 군사법원 안보의 침범인 군이 청와대의 일방적 ‘평화놀음’에 부화뇌동

- 대의기관인 국회 동의도 없이 비준한 남북군사합의서 발효와 관련, 서해 NLL 및 DMZ의 평화 조치 등 관련 구체적 대안 없이 후속 협의로 넘겨 안보상 위협요인 상존하는 문제 추궁

장제원 의원실

문재인 정권下 무너진 헌정질서 및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말씀

주요내용

| 법무부 : 구치소 과밀수용, 현재 위험판결에도 뒷집지는 법무부

- 지난 16년 12월 현재, 구치소 과밀수용 인간 존엄성 침해한 위험판결 결정에도 수용 공간은 不확충, 수용인원은 增加
- 100대 국정과제 포함사항인데 관련 공무원만 늘리고 시정은 全無
- 현재 위험판결문에 적시된 수용인원별 개인사용 면적, 실제 사이즈 모형 제작해 현장 구현 및 현장 사진 및 실사 바탕 3D 시뮬레이션 구동, 과밀 수용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체감률을 높여 정책반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혼거실 모형물을 실제 크기로 제작하여 성인 남성 수용인원별 수용 현황을 동영상으로 현장 구현하여 과밀수용 실태의 충격적 민낯 공개
-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 회복을 先導

| 검찰 : '4권 장악' 및 '정치보복'의 도구化

- 적폐청산 명분, 언론 - 행정부(보수정권) - 입법부(국회) - 사법부(법원)등 4권에 더해 자신의 조직까지 희생시키는 행태를 사례별 지적
- 정권의 권력유지 plan에 도구化, 전방위 편파적 정치수사 행태 질타

| 법원 : 사법 기강해이의 本流, 자체 청산 및 정화노력 촉구

-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보복성 징계청구 및 공보실 운영비 부적절 사용 실태 지적
- 서울중앙지법의 민중기 법원장 제식구 감싸기 영장기각 및 추가조사위원회 은폐 조사 행태 摘發

| 감사원 : 청와대 면죄감사·부실감사 실태 및 청와대 수시보고 濫用

- 감사의 중립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정권유착형 수시보고 개선방안 촉구
- 청와대 기관운영감사 당시 특수활동비 부실 감사 실태 지적

| 법제처 : 靑 직속 변호사사무실格 下命 심사·해석 행태

- 법제처, 판문점 선언 vs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고무줄 심사
- 헌법 정신 妄覺한 의도적 법리 오독 附逆 행태 질타

정갑윤 의원실

문재인 정부 1년, 불공정 코드인사! 경제 파탄!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 의원 겸직 장관 33.3%, 3권 분립 정신에 위배 (세계일보, 10.29)

- 역대 김대중(19.8%), 노무현(13.2%), 이명박(22.4%), 박근혜(23.3%)
-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 저해, 의원 겸직 장관 임용 지양해야 함.

|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법제처 심사 결과 (국민일보, 10.29, 5면)

-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의 국회동의필요 여부 등 심사 결과 '畵文'에는 법제처의 이중적 심사 잣대가 나타남.

| 靑 파견 감사원 직원 9명으로 늘어...“정치 감사 우려” (문화일보, 10.22, 6면)

- 청와대 파견자 중 상당수가 고속 승진을 하는 점 등, 관행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 큼.
- 현 감사원 김종호 사무총장, 감사원 공공감사국장 → 청와대(진급) → 사무총장 복귀 등 지적함.

| 관피아법 우회... 또 다른 전관예우 논란 (국민일보, 10.10, 1면)

- 올해 공직자 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출신 14명 중 11명이 사기업 법률 자문, 고문으로 취업사례 등 지적함.

| 文 대통령 취임 뒤 공기업 '개방형 감사' 76%가 코드인사 (TV조선, 10.5, 9시)

- 문 정권 이후 감사 임용된 사람 대부분이 청와대,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캠프출신임이 밝혀짐.

|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추계 철도 등 10개 분야 최소 103조(문화일보, 10.2, 1면)

-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관련 10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 원 소요됨.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의뢰)

주광덕 의원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권·검찰권 행사 요구 및 촉구!

주요내용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 ‘재판거래’, ‘법관사찰’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 공염불! 수사협조에 소극적이고 압수수색·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시키며 제 식구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 지적
-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장주의 위반, 직권남용’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강행으로 사건 수사된 점 지적,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 현직 고위법관들의 의혹도 철저히 규명될 것 강조

|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적!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수사에 몰두해온 검찰, 전국 지검·지청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및 투입, 민생과 직결된 일반형사부 인력난 호소와 미제사건 속출 지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제멋대로인 검찰인사전행 질타
- <전광석화 일사천리 적폐청산 VS 오리무중 원조적폐>로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것을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사건들 중 노건호·연철호 500만 달러 수수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짚어냄.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필요? 청와대 거수기 법제처 질타!

- 2007.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국회비준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해석 내렸던 법제처,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
- 판문점선언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 지적하며, 오락가락하는 법제처, 청와대 의중대로 유권해석 내리는 법제처 지적

| 재벌에게 특혜주고 있는 사법권력 질타!

- 2011. 1. 배임, 횡령으로 구속된 후 단 63일만 복역,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통해 지금까지도 수감되지 않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등 제도적 허술함 지적 및 법원·검찰의 성찰 촉구

2018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현 정부 신 적폐인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고용 참사를 덮기 위한 청와대발 가짜 일자리 사업 실태, 현 정부 대북 제재완화 조치의 경고인 미 재무부의 우리 7개 시중은행에 대한 컨퍼런스콜 미온적 대응, 정권 눈엣가시인 한미연구소(USKI) 폐쇄 개입 의혹 등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한 자료 조사 및 팀플레이 대응으로 쟁점화 및 언론 집중 부각
 - 정무위 피감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훈복지의료공단,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감원 등 기관에 친인척 재직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총체적인 고용세습 폐단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 당위성 강조
 - 특히, 현 정부의 고용 참사에 대한 국민 눈속임용 단기일자리 사업이 결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으며 통계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장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허구 지적
 - 또한, 미 재무부의 우리 시중은행에 대한 컨퍼런스콜 요청 사안은 금융당국이 숨기기에만 급급했으나, 당 소속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컨퍼런스콜 요청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내고, 현 정부 대북정책에 속도 조절 필요성 등 부각시키고,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 주문 등 소기의 성과

✓ 평가

- 문재인 정부 2년 차, 실질적인 국정감사로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식 핵심 정책들에 대한 합리적 문제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부각 노력
 - 국감 초반 정무위 산하 금융위원회 등 장관급 위원회의 정책전문관 임용 관련, 정부 여당의 자기 사람 챙기기 행태에 대한 부당성을 공동성명서 발표 등 강력 대처함으로써 언론의 집중 조명 및 국감 분위기 주도
 - 국감 중반에는 미 재무부의 시중은행 대상 컨퍼런스콜 사건을 집중 부각시켜 우리 금융당국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질책과 선제적인 대책 주문, 후반에는 현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부작용인 공공기관에 만연된 고용세습 실태 고발, 한미연구소 폐쇄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집중 공격 및 이슈화
 - 다만, 큰 이슈 중심으로 거론되어 서민 실생활 정책 검증 및 대안 제시 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은 있으나 향후 상임위 정책 현안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추진

김종석 의원실

세월호참사 특조위, 혈세낭비에 부당한 위원장 측근 비서관 채용

주요내용

| 세월호참사 특조위, 혈세낭비에 부당한 위원장 측근 비서관 채용

- 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조사개시도 하지 않은 채 지난 3월부터 규정 만들고 행정적 절차 논의하는 데 시간 허비하며 급여를 받고 있음.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에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사개시조차 안한 특조위가 8월부터 세월호 관련 경위 및 자료조사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등 명백히 사전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게 조사개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임.
- 지난 8월 법적근거 없이 ‘위원장의 활동 보좌’ 명목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언론 팀장을 지낸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은 위법·부당

| 한미연구소(USKI) 폐쇄에 청와대 개입, 국익손상에 정권 차원 책임

- 한미연구소 폐쇄가 겉으로는 회계 불투명 등을 이유로 하나, 결과적으로 ‘38노스 폐쇄로 대북 정보 자산 상실, 미국 정관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기능 중단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결과’로 이어짐.
- USKI 폐쇄 과정 전반에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정권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음. 국익 손상을 감수해가면서 무리하게 공공외교안보 자산을 증발시킨 것은 직권 남용이자 권력 남용
- 일본에 빼앗긴 38노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기능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함.

| 산업은행, 1조2천억 쏟아부은 KDB생명 경영 적자 지속

- 민간에 매각된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는 5년 만에 2조 이상 벌어들인 반면 산업은행이 인수한 KDB생명은 적자에 이익잉여금없이 누적결손 상태
- 사실상 국영보험사인 KDB생명은 군말 없이 즉시연금 일괄구제 수용하는 등 정권 나팔수 노릇 까지 하고 있음.
- 산업은행은 인수해서는 안 될 회사를 인수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 하고, 구체적 지분보유 주식 매각 기준 만들어야 함.

김선동 의원실

경제실정, 중요 사항 은폐, 정치보복, 정책무리수! 문재인 정부 실책에 강력 비판

주요내용

| 美 재무부, 남북경협에 경고! 컨퍼런스 콜 개최 은폐한 금융당국 질타

- 美 재무부가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을 통해 ‘남북경협 심히 우려, 대북제재 지속’ 등 상당 수준의 경고성 메시지를 금융당국에 전달.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은폐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해온 것이 드러남.
- 금융당국은 20일이 지나 후속조치 논의 없는 준법감시인 회의 개최, 이를 비공개하다가 금감원장이 국감장에서 회의 개최 사실 시인
- 최근 실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제재 패턴 변화 확인 및 금융당국에 정확한 사실관계 공개와 금융회사의 대북제재 리스크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응 로드맵 마련 촉구

| 19개 부처 중 단 3곳만 응답한 ‘적폐청산’, 청와대發 정치보복임을 입증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지정한 19개 부처 중 단 3곳만(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적폐청산 TF 구성 그러나 나머지는 사실상 조직개편·제도개선으로 운용
- ‘적폐청산’은 국정과제 관리부처인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인 권익위가 이행점검, 관리조차 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선동구호에 불과한 청와대發 정치보복이었음을 확인

| 막무가내 입법, 기업 옥죄기에만 앞장선 김상조 위원장, 연일 사과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에 대해 해당 부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 이고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했는데도 국회에는 부처 의견 수렴에 문제가 없었다고 허위보고했음을 밝혀내어 김상조 위원장 사과
- 무혐의가 36%에 달하는 무분별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지적하여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일관한 공정위의 무리한 법 집행을 지적함.

| 서민을 궁지로 내몬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 당부

- 금융위의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으로 저신용자의 저축은행 신규대출이 20.5% 감소했음을 지적. 최고금리 단계적 인하, 서민지원자금 확대 등의 대책 촉구

| 이외에도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실 내부검토의 문제점 지적 ▲보훈처 보훈정책 통합·조정 제안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시스템 개선 요구

김성원 의원실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 민생을 위한 정책국감!

주요내용

| 공공기관 불법 고용 승계, 국무조정실이 선제적으로 전수조사 실시해야!

- 공공기관 친인척 불법 고용 승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무위 산하 공공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 19명이 정규직 공채에 합격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밝혀냄.
-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국무조정실의 선제적인 전수조사 실시 필요성 강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대기업 재취업자 문제 지적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지로 출범시킨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예산 남용 문제 지적
-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가 공정위에 출입하면서 현직 직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 차원의 내부단속 강화 및 근본 대책 요구

| 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남용 문제 지적

- 부정청탁금지법을 소관하며 어느 부처보다 제일 청렴해야 할 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업무추진비로 고가음식점은 물론 술·안주류가 함께 판매되는 곳까지 수차례 식사한 점을 밝혀내고 지적

| 금융위원회,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 우려

-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 개인과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가계대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김용태 의원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진행한 2018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 - 공론화의 과잉, 무책임한 정부, 정책혼선과 국민의 피해

- 중앙정부의 '공론화정치'가 기초단체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모양새
-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는 선한 의지와 달리 현실은 정부의 책임회피를 우려
- 주요 국가정책이라면 비전문가인 시민참여단에게 결정토록 하기 이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과 정부 관계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안을 먼저 도출'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일 것임.

| 권익위원회 - 파견 공무원 직무 배치 문제

- 각 부처로부터의 파견 공무원 4명 중 1명 꼴로 원소속 부처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무 담당
- 파견 온 공무원은 권익위 실무진의 19.6%나 되고 대부분이 민원업무로 투입됨.
- 직무 불일치에 따른 업무의욕 저하와 이에 따른 국민 불만 고조가 우려됨.

| 국가보훈처 - '병급금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역차별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은 보상금과의 병급이 금지되어 있음. 수당끼리의 병급도 금지되어 있음.
- 주무 부처인 보훈처는 병급금지 해지에 반대입장 고수 (사실상 예산상의 이유)
- 보훈 주무부처로서 병급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더 중요할 것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복지제도의 시혜적 입장과는 달라야 함.

| 금융감독원 - 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부지급 건수가 2017년 94,627건, 2018년 상반기 40,338건임.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과소지급이나 지급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더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 - 고령자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거절 문제

- 보험업법 시행령 15조 1항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의 조항에 따라 80세 이상의 경우 여행자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음.
- 100세 시대를 앞두고, 과거 10년 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고령자가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김정훈 의원실

금융권 예대마진과 휴면보험금, 정부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취업실태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 금융권의 예대마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 김정훈 의원은 『국내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마진 및 예대금리차』를 파악한 결과, 2015년~2018년 6, 7월까지 은행 예대마진 수입 약 109조 원, 2018년 6월 예대금리차 2.08%, 저축은행 예대마진 수입 약 11조8천억, 3년 평균 예대금리차 8.6%임을 확인하고 이를 질의하였음.
- 질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권을 비판하며, 금융감독원장에게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 금리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음.

■ 보험사 휴면보험금 운용실태를 지적하고,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의지 밝히

- 현재,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된 휴면보험금은 약 4,260억 원이나 되며, 서민금융진흥원에 이 금액을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계정 관리 없이 운용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김정훈 의원은 대책방안으로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시키도록 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향후 논의 진행)

■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취업실태에 대한 비판 및 분석

- 김정훈 의원은 해외취업사업 정책에 따른 실태를 확인코자 국회예산정책처에 『2015년~현재 정부 해외취업사업 집행 실태 분석보고서』를 의뢰, 정부 해외취업사업 지원인원 중 취업인원이 약 48.1%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질의하였음.
-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해외취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 현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부분(약 94%)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은 6.3%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였음.
- 김정훈 의원은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김진태 의원실

공공기관 재취업 및 해외출장 등 위법성 지적

주요내용

| 산업은행 재취업 관련

- 산업은행이 고위 퇴직자들을 당행과 대출계약 1조 4천억 원을 맺은 회사들로 '재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계약이 남은 회사에 재취업한 20명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 담당이사(CFO), 감사·본부장·고문·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함.
- 산업은행의 퇴직 임직원 재취업은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가는 건 보은성으로 보이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한정한 낙하산 전면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 필요

| 주택금융공사 해외출장

- 한국주택공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유관기관 비용으로 미국, 영국 등 16개 국가에 총 18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
- 이정환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언론사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에게 출장 비용 전액 또는 항공비를 제외한 비용 일체를 부담
- 직무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기에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

| KDI 법인카드 사용

- KDI는 리조트, 백화점, 초호화 레스토랑, 항공권 등 5년간 200억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
- 클린 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말에도 다수 사용했음이 확인
-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방만 경영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

성일종 의원실

서민에겐 금융사다리, 가짜 일자리,
자동차 산업 지배구조개선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최초로 정부 재원 투입 답변받아

- 서민금융을 위해 투입된 규모는 37조 원 수준이었으나, 은행과 카드사 등 출연금, 복권기금으로 충당하였음.
- 즉, 정부재정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차원의 금융정책 지원이나 재정투입은 요원했다고 지적함.
- 이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도가 열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 저신용자를 위한 복지 차원의 정부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국무조정실) 단기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아니며 통계 착시 현상 일으킬 수 있다.

-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예정에 없던 대규모 단기일자리 채용을 계획하였음. 단기일자리란 주요업무는 단순 사무보조업무로 정부가 경영평가 등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을 압박하였음.
- 국정감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일자리 질이 좋아질 수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채용 규모에 따라 통계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힘.
- 단기일자리란 결국 가짜 일자리로 정부가 고용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방편책이며, 정부는 그동안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며, 결국 단기 일자리 대책만 양산했음.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부품업계 관행 끊고 새로운 공정 시장 구축 촉구

-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비해 1차 협력업체는 영업이익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자사 브랜드 업체는 협력업체보다 10배 많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자동차 부품 A/S 시장의 경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종속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태계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과감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위기에 빠진 자동차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주호영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탈원전의 허구성 검증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 대안 제시

주요내용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성급한 탈원전의 문제점 확인

- KDI,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라는 것 확인
- ‘고용의 질 관련 청와대의 주장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는 공식 답변받음
- 원전의 전력생산량은 태양광의 18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 제시

| 배달 앱·인터넷 쇼핑물 등 인터넷 플랫폼 문제 지적

- 배달 앱 과도한 수수료, 프랜차이즈 우대정책, 광고 경쟁 유발 문제 지적
- 구글·애플 중계수수료 30%, 자사 앱 끼워넣기, 광고비 떠넘기기 밝혀내
- 네이버 불공정거래 문제 지적 : 자사 네이버페이 가입 사업자 쇼핑검색에 우선 노출, 자사 쇼핑물인 스토어팜과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우대
- 인터넷 쇼핑물 관련 소비자원 민원 급증. 先 환불 정책 도입 촉구

|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 환경 조성 노력

-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676조)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161.5조 달해. 중소기업자금 영역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시켜 별도 관리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저금리(0.5~0.75%)로 조달받아 일반금리로 대출, 사실 은폐 시도에 대한 조사 촉구
- 노령층이 보호 한도(5천만 원)를 모르고 그 이상의 예금을 저축은행에 맡겨.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5천만 원 이상 예금 비중이 계속 늘고(12년 7.9% → 18년 17.4%), 초과 예금자 43.6%가 60대 이상인 점을 지적. 금융위원회, 예금보호공사의 예금한도 홍보 및 분산 예금 노력 확대

2018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폐기 촉구
- 정부의 5.9만 개 공공기관 단기 알바에 대해서는 정부가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을 통해 고용 수치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총공세
 - 청와대가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으로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고 세금 일자리를 통해 단기 고용지표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
 - 이는 청와대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단기 일자리를 늘려 통계 조작을 하고, 그 기저효과로 내년도 고용지표가 반짝 개선되면 가짜 경제지표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고 우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 전후로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및 채용 비리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
- 통계청의 경우, 개청 이래 첫 단독 국감을 실시. 통계청장 경질과 가계동향조사 개편 방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
 - 신입 청장, 국가통계생산기관 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보고 상의 통계 해석 오류에 대해 사과. 또한, 재직기간 동안 정치적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수치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약속
- 한은에 대한 여권의 과도한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해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올릴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 등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
- 재정정보원의 잦은 시스템 오류,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징후에 대한 நட장 대응, 조직 인력 운영의 쏠림 등 조직 전반에 걸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

✓ 평가

- 여권의 심재철 의원에 대한 기재위원 사퇴 공세 및 국감 증인 채택 요구 등의 국감 무력화 시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국감 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
- 민주당의 반대로 청와대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前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과 황수경 前 통계청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은 아쉬움
- 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 대통령의 세무조사 간섭행위 금지법,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보완책, 퇴직 공무원의 대형법무법인 위장계열사 불법 취업 방지, 고질적인 조달 비리 문제 개선 방안 등

추경호 의원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민간과 시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주요내용

| 통계자료와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해 확인

-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작년에 비해 공공부문 일자리 6% 증가할 때 민간 일자리는 0.1% 증가했음을 밝히며, 재정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정부가 국민 세금을 마구 투입한 결과 공공일자지만 늘어나고 민간 일자리는 축소
- 통계청 고용 동향 분석 결과, 일용직과 임시직의 1~8월 월평균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4%, 2.0%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취업 감소가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집중된 문제 지적
- 지난 1년간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 가구 중 하위 60%(2/3)의 소득 감소, 일자리는 줄이고, 소득 불균형은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주장

|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주도하는 행태 비판

- 공기업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수익성 및 생산성 지표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현 정부 들어 모두 악화되어 지난 정부 공공기관 효율화 성과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 결국 국민 부담의 증가 초래할 것
-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일자리 늘리기로 한전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2016년 전망에 비해 78.1% 급감, 주요 39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10분의 1 토막이 될 전망이고 부채는 500조 원 넘어설 것

|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하여 단기적인 일자리 급조 지적

- 연말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여 실효성 없는 단기 일자리를 무리해서 찾아낸 것을 지적, 국민 세금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 대책 필요
- 정부는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600명),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933명), 도로 불법 시설물 및 포장상태 조사(967명) 등 공공기관을 통한 단기 일자리 확대

권성동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기재위 소관기관의 의혹을 파헤친 국정감사

주요내용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인정하고 정책 방향 대전환해야!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고용 참사가 일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부어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자리 분식(粉飾)으로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며,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격화소양’식 대책임을 지적함.
- 현 정부가 주택 공급과 수요 억제만 하다가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는데, 이를 낮은 금리 탓이라며 정부여당 인사들이 금리 인상 압력을 넣는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한국은행에 돌리는 것임을 지적함.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사업으로 본, ‘조달마피아’ 입찰비리 문제

-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추진 중, 조달청은 기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입찰예정 가격을 초과한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함.
- 입찰 평가를 담당한 조달청 공무원들과 민간건설사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들이 서로 내통하면서 특정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독식하는 문제가 있음. 이를테면 계룡건설은 시공평가 17위이지만, 수년째 공공부문 수주 1위 업체임.
- ‘조달마피아’들이 주도하는 현행 기술제안 입찰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함.
(질의 이후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 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계 왜곡의 정점

- 장하성 정책실장은 1990년 이후 가계 총소득보다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의 근거로 주장해 왔음.
-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서 같은 액수를 벌어도 가구당 소득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점을 무시한 잘못된 비교로서, 소득 불평등 확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
-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나 같으면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을 것’이라 발언하며 장하성 실장의 통계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음.

김광림 의원실

가짜 통계에 근거해 미래 부담 늘리는
세금일자리 중단 되어야 등

주요내용

| **현 정부의 제1국정 과제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이 2017년 대선 당시 잘못된 통계에 기초해 작성된 것임을 밝히고 수정을 촉구**

- 공공일자리 비중을 7.6%로 알고, OECD(21.3%)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3%p 높인다는 계획 아래 공무원 17.4만 명 증원 등 81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공약하고 제1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12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일자리는 8.9%,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립학교 교원 등 사실상 공공일자리는 15%를 넘어섬을 지적하며 국정과제를 제대로 된 통계를 사용해 재설계할 것을 요구

|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1년 평가 결과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지방은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집값 냉골 상태인 점을 지적**

- 서울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채를 팔고 농어촌 또는 고향주택(출생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이하 소규모 지방도시)을 구매해 귀향하는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10%)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를 정상적용해주는 대안을 제시
-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취지에 공감한다. 일리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국정감사 기간 중 입법 연계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높임.

| **강남 소형 저가 2주택 소유자와 강남 고가 1주택 소유자 간 양도소득세 격차가 43배에 이르는 점을 밝혀내고, 감사 기간 중 입법으로 이어나가 감사의 실효성 제고**| **입국장 면세점, 지난 정부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보완책 없이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점을 지적**

- 대안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 설치를 제안해 관세청장의 ‘동의’ 답변 이끌어 냄. 향후 입법으로도 연계

나경원 의원실

‘馬耳東風’ 文정부, 세금 포퓰리즘 경제정책 이제 그만!

주요내용

Ⅰ 文정부의 시한부 포퓰리즘 경제정책,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폰지사기’

- 급조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정책’의 실체는 결국 통계용 분식 일자리, 세금으로 돈 나눠주는 복지정책에 불과함을 지적함.
- 올해 2분기 기준 공공기관 정원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6.9%, 그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의 경우 34.4%에 이르는 최대 증가폭 보임. 공공기관 재정상태 악화를 촉발시켜 향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최악의 사태 도래가능성을 경고함.
- 1:9 평가르기 조세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개세주의 원칙 및 복지정책-조세정책의 정합성 주문 :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고,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0%를 부담하는 ‘양극화’된 조세구조 개편 필요성 지적. 특히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부동산 거래세는 두고 중부세만 인상하고,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보료 인상 등 준조세를 증가시킴.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43%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함.

Ⅱ 정권 눈치 보는 ‘코드통계’ ‘코드 세무조사’ 실태 지적

- 코드통계 일삼는 통계청 : 코드인사 논란 신임 통계청장,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통계청 업무도 아닌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분석자료 첨부하고,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발표시에도 최저임금 긍정효과만 강조되도록 분석하는 등 통계청의 ‘코드통계’ 실태를 밝혀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계 업무에 정진할 것을 주문함.
- 정권 입맛 맞추기용 코드조사 : ‘참여정부 시즌 2’ 수준의 6차례에 걸친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로 무려 2,550억 원을 추징한 문재인 정부 국세청의 ‘코드 세무조사’ 실태를 밝혀내고, 세무조사를 정권의 정책도구로 활용하면 피해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감을 지적함.

Ⅲ 대북 퍼주기에는 관대, 대북 제재에는 안이한 文정부

- 1991년 식량차관 이후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금 총 6조 8천억 원, 이 중에서 북한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대북 차관만 무려 2조 4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깍깍이’ 지원 등 정부의 ‘대북 퍼주기’ 실태를 지적함.
-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와 국내은행 간 컨퍼런스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기재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 한편, 관세청의 유엔 제재대상 선박에 대한 부실조사 실태를 밝혀내고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공조 위기를 경고함.

박명재 의원실

대국민 여론조사로 정부 경제정책 실정 증명, 현실적 대안 제시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_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해와 문제점 지적

-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함.
- 국민 여론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일제히 소득주도성장을 외면하고 있지만, 정부만 나홀로 잘못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음을 증명함. 정부의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수정하고, 미래에 부담 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멈출 것을 지적
- 공공기관 압박해 ‘장하성 구하기’ 가짜일자리 창출의 폐해를 지적,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성 강조

| 기획재정부 _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분석과 대안 제시

- 기업R&D투자공제율이 2/3 감소 현상 분석을 통해 밝히고, 미래먹거리 확보 위해 R&D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안 제시
-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개소세 부과시점 차이로 연 1,900억 원의 국가세수 누수가 발생함을 밝혀냄. 대안으로 개별소비세법 제4조 개정안을 제시
- 35년 전 기준적용하는 비과세급여 항목 한도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환기시키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친화적 세제개편 필요성을 주장
- 정부의 로도 법인판매 회수가 밀실 회의로 진행되고 있음을 언론 통해 최초 공개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울 때 편의점 법인판매권을 갑자기 빼앗는 정부의 회수 타이밍과 방법 잘못을 지적, 대안 마련을 주문
- 조폐공사가 민간 핀테크 시장을 빼앗고 정부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구조개혁과 해외시장 개척 대안 제시
- 이상고은 복지사각지대 놓인 국민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제시

| 국세청 _ 정치권력에 따른 세무조사 운용 지적

- 대통령의 세무조사 간섭이 위법행위임을 주장. 실제 매년 조사를 받는 자영업·소상공인이 年 1천 명에 불과, 569만 명 유예는 지나친 생색내기 지적
- 국세청이 조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 못하도록, 대안으로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시함.

심재철 의원실

재정정보원 예산정보 관리부실 및 청와대 등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주요내용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OLAP시스템 부실관리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 수백억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관리 못함.
- 시스템 오류를 덮기 위해 피감기관이 감사위원실을 고발한 초유의 사태
- 재정정보원의 관리부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각종 자료요구 회피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 청와대의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 총231건 41,32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도 1,611건 204,618,390원에 달함.
- 주점사용 의심(비어, 주막, 와인바 등) 236건 31,325,900원
- 기타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 3,033건 414,695,454원에 달해 추가조사 불가피
- 이처럼 불투명한 업추비 집행은 청와대뿐 아니라 전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정권차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음.

청와대의 뻔뻔한 거짓 해명

- 청와대는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업무협의를 늦어져 늦게까지 문을 연 ○○맥주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24시간 일하는 곳’이라는 등의 해명을 했으나 의원실의 분석결과 동일카드로 식사와 2차를 간 것으로 밝혀짐.
- 국회의 지적에 반성은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을 일삼으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줌.

감사원장의 청와대업추비 감사 부실 인정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다”고 부실 감사를 시인
-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중요한 반박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청와대 해명의 진실성은 물론 감사원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
-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 감사원의 청와대와 재정정보원 감사, 김동연 부총리의 국회의원 사찰 의혹 수사 등의 추이를 주시하여 당차원의 야당탄압 저지 투쟁 및 투명한 국정운영 감시활동 적극 전개 필요

엄용수 의원실

문재인 정부, 말뿐인 '친서민 정부', 소상공인탄압·경제 파탄 주범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행정감찰 실시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 삭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가 등록한 1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발송, 법적근거 없는 월권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련된 행정감찰을 실시
- 기획재정부,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 5억 원 삭감
-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적폐로 몰았으나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방위적 탄압

| 외국계 법인 과세 조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외국계 법인의 익금산입액 대비 손금산입액 비율은 1.00 내외인데 비해 국내 법인은 1.13 내외로 나타남.
- 현행 국내 조세법 체계가 외국계 법인의 활동영역에 대해 손금 인정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외국계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이 과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의 주범

- 1년간 소득 1분위 저소득층 소득 13만 원 증가, 빚 갚는데 25만 원 사용, 저소득층 삶이 더 어려워짐.
- 2018년 일자리 증가 폭, 2017년 대비 1/3 급감한 10만 8천 명, 실업급여 지급액, 작년보다 25% 늘어난 4조 5,147억 원, 2018년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 반년 만에 40조 늘어난 590조 7천억
- 국가경쟁력은 떨어져 경제지표는 최하위 수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경제라인 총사퇴해야

윤영석 의원실

위기의 한국 경제, 조속한 대책 필요

주요내용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해야

- 고용참사의 상황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의 비리 등으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채용전형에서 절망하고 있음.
- 국민들은 감사원 감사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정조사나 검찰 및 경찰에 의한 수사에 의해 진상 규명하여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 비리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역외탈세, 개선방안 마련해야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로 국부가 유출되고, 과세기반이 크게 줄어들며 위화감을 조성하여 법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임.
- 국세청은 지난 5년간 6조209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실제 징수율은 2013년 88%에서 2017년 85.6%로 오히려 24% 줄어들었음.
- 추정대상자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 소송을 제기하여 징수율이 낮아진 것이므로 국세청은 탈세 대응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세 전' 조사와 '과세 후' 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을 촉구함.

종부세 개편,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의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 부동산 종부세 개편으로 보유세가 인상되면 부동산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필수적이나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부재함.
-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규제하여 지방 부동산은 폭락하였으므로 정책이 풍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임.

이종구 의원실

“합리적 비판, 생산적 대안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국감으로”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음

-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이전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렸는데,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는 역대 최악임을 지적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및 시장원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
- 종부세 강화 등 실패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재탕 대신 공급 확대 정책을 펼 것을 제안
- 면세자 축소 없이 EITC만 확대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적 조세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
- 경기는 최악인데 정부만 홀로 세수 호황인 상황을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도입을 주장

| 정책 제안을 통해 긍정적 검토 약속을 받아냈음

- 소비자물가지수가 서민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여, 서민의 소비 패턴에 따른 서민 체감 물가 지수 개발 약속을 받아냄.
-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경기하강 국면 여부에 대한 공식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 국세청의 ‘불복제도 개선’ 논의가 납세자 권익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일방적 개선안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회생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여, 금융사들과 연계한 자금 지원 신규 펀드 설립과 수은의 자금 지원책 마련 답변을 받아냄.

| 송곳 질의를 통해 정부 부처의 사과를 받아냈음

-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해 한진 사건을 부풀린 것에 대해 질타하자, 관세청장이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음.
- 국세행정개혁 TF의 형식적 운영을 질타하자, 강병구 위원장이 TF 운영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미흡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였음.

최교일 의원실

소득주도성장, 저출산 대응, 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주요내용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임.

- 전체 소득의 5.8%에 불과한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
- 결국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임. 세계 70억 인구를 상대로 활동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
-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99.8%, 일자리의 88%, 고용기여도 9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바람.

| 15년간 이어져 오던 40만 명대 출생아 수, 30만 명대는 2년 만에 붕괴

-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유지되어 오던 40만 명대 출생아 수가 2017년 35만8천 명, 2018년 약 32만 명으로 내년에는 20만 명대 출생아 수 예상
- 지난 10여 년간 100조 원 넘게 저출산 정책에 투입했으나 결과는 참담함.
- 해외사례와 같이 과격적인 재정정책으로 저출산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함.

| 탈원전 정책으로 작년 공공기관 법인세 7천억 원 감소

- 한전 등 전력공기업 법인세수 1조3천억 감소할 때 다른 공공기관의 법인세수는 6천억 원 증가했음.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가동률 감소와 석탄, LNG 비중증가가 가장 큰 원인
-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도 작년 말 447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증가 추세임. 세계 원전이 하향추세라는 정부의 주장도 근거 없음.

2018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인사와 교육계 캠프더 인사 실태 부각
- 문재인 정권은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교육무능정권 입증
 - 대입정책은 공론화위 떠넘기기
 - 1년 정책유예 했던 방과후 영어교육은 결국 도돌이표
- 1년짜리 장관의 조급한 고교무상교육 발표
 - 인기영합적 조기 추진 계획으로 인한 준비부실 집중 질타
- 초법적 전교조 감싸기와 이념편향적 교육실태 집중 질타

✓ 평가

- 교육정책의 대혼란을 유발했던 무능한 교육부장관(김상곤)에 이어 위장전입과 각종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거부 무자격 장관(유은혜)을 임명 강행한데 이어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규모의 캠프더(캠프-코드-더민주) 인사실태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무시·오만한 국정운영 강력 질타
- 철학부재의 오락가락 교육정책. 무능 교육의 결정판임을 입증
 - 특히 수능절대평가 도입 대혼란 유발 이후 대입 공론화위에 입시정책을 떠넘기면서 교육부 스스로 대입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포기하였음을 지적하고, 대입 공론화위의 전문성·책임성·지속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입과 무관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위법성·부당성 지적
 - 초등방과후 영어교육 논란 관련하여 반대의 당사자였던 유은혜 장관이 정책유예 10개월 만에 허용함으로써 오락가락 정책 바꾸기 실태 부각
- 현직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되자마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휴직허용, 직위 해제된 전교조 교사에 대해 대법확정판결 前 복직을 승인하는 등 좌파교육감들의 초법적이고 노골적인 전교조 감싸기 지지행태를 집중 부각하며, 이를 방조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침묵에 대해 질타
- 국감중 상도유치원 학부모 대표단과 당 교육위원 간담회를 실시 및 학생주거복지 관련 보증금 지원 제도 제안 등 현장밀착형 대안 제시

김한표 의원실

학교는 안전해야 한다.

주요내용

| 아이들은 줄었는데 여전한 학교안전사고

- 2014년 693만이던 유초중고 학생이 올해 8월 기준 626만 명으로 4년 만에 70만 명이 감소함. 그러나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11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일반인조차 이해하기 힘든 기준으로 관리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심 촉구
- 아이들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나 학내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음을 지적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내 안전 방안 마련 촉구함.

| 올해 식중독 급증, 무상급식이 무상식중독으로?

- 지난 2015년 38건, 2016년 36건, 지난해 27건이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이 올해에만 125건 발생함.
- 지난 8월 ‘개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9월 케이크식중독을 막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을 지적함.
- 올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들의 상당수는 원인 식품조차 찾지 못해 ‘무상급식’이 ‘무상 식중독’으로 변질된 것임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 촉구함.

| 우리 학생들에 치우친 찬양과 왜곡 가르친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 지역 중·고생 858명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 골든벨’ 행사를 개최함 (예산 5000만 원).
- 예상 문제집과 본선 문제에는 남한은 개인주의로 폄하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집단주의는 ‘우리식’, ‘가족’, ‘공동체’ 등으로 미화시켜 학생들에게 출제함. 이런 문제를 출제한 시민단체 인사들은 출제수당까지 챙겨감.
- 이에 독재세습국가와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욕임을 지적하며, 본행사 재검토와 북한 인권 실태와 3대 독재 세습 등 실상을 알릴 것을 촉구함.

곽상도 의원실

고용세습 의혹 / 우석대학교 허위경력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조정

주요내용

대학교·대학병원 재직자 고용세습 의혹

- 부산대병원 재직자(민주노총) 자녀 2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노사합의 이후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넉 달 만에 정규직 전환
- 경북대병원·전남대병원·부산대학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된 직원 중 일부는 재직자의 자녀
- 고용세습 의혹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요청

유은혜 관련 우석대 허위경력 발급 실태

- 교육부 장관의 우석대학교 허위경력 발급 문제 지적
- 국공립대학교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과 비교하며 사립대학교(우석대학교)의 경력증명 문제 제기
- 유은혜 외 민주당 등 정치권 주요인사에 대한 허위경력, 경력 부풀리기 진상 확인을 위한 우석대 경력증명 실태 전수조사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등 교육정책 조정

- 교육부가 오류가 드러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교원수급 계획을 세우며 과도하게 교원 수를 부풀린 문제점 지적
-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학생 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 예산, 교육청 예산, 교원, 직원 수는 매년 늘고 있음. 저출산 기조에 맞춰 교육계의 다운사이징 적용 주문
-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ICT교육, 개인의 창의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조성 시급

김현아 의원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주요내용

|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

- 매 학기 두 과목씩 8과목 듣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 A+
- A교수 아들 학교편입, 입학관리처 신고 누락, 아들은 공동 2등으로 합격
- 직원 자녀 세 명, 모두가 해당 학교에 재직, 본인도 비공개로 재취업

| 교사의 지속적인 장애학생 폭행에도 특수학교 2곳, 교육부 '양호'로 평가해

- 서울교육청 "특수학교 폭행 특별장학서 가해 교사는 조사도 안 해"
- 경찰은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해 10여 건의 폭행이 더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교육청 장학팀은 확인 못 해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 데 적립금 악용

- 5년 동안 인출 없이 적립만 한 사립대학은 연구기금 36개교, 건축기금 18개교, 장학기금 14개교
- 적립 필요하지만, 일부 대학은 목적에 맞는 인출 없이 적립만 해 적립금제도 재단 싹쓸이 마련에 악용

| 학교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

- 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제거 23.6%에 그쳐 제거까지 10년 소요
- 학교건물 내진율 28.1%에 그쳐 보강까지 12년 소요
- 전체 68,930개의 학교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34.4%에 달해

| 구조기술사 1명뿐인 회사, 국립대학교 내진 성능평가 259개 동 60억 수주

- 국립대학교 무리한 내진 성능평가, 불법 하도급 조장해
- 무지한 교육부, 구조적으로 부실한 내진 성능평가로 결국은 부적절한 보강공사비로 이어질 것

| 초·중·장애 아이들 통학 거리 지구 3바퀴 육박

-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 늘어날 수밖에 없어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필요

이군현 의원실

기초학력 부진학생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내용

| 배경

- 국제·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하위수준 학생 비율 증가추세 지속
 -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수학)
 - 중 학 교 : 2015년 (4.6%) → 2017년 (6.9%) : 50% 증가
 - 고등학교 : 2015년 (5.5%) → 2017년 (9.2%) : 67% 증가.
 -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하위수준 비율 (수학)
 - 2012년 (9.1%) → 2015년 (15.4%) : 69.2% 증가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초등학생은 2013년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중고등 학생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전수조사에서 표집 조사로 변경되어 전국시도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실태 파악이 불가능해짐.

| 현황

- 기초학력 관련 막대한 예산 지원
 - 국비 : 최근 5년간(2014~2018)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 국비 총 918억 원 지원
 - 국비 이외에 해마다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교육청 예산 지원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 국정감사자료 제출 회피 및 거부
 - 2018년도 이군현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청(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에 대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자료 부존재', '자료 미취합'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 거부, 부실 자료 제출함.

| 성과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조화가 가능함을 밝히고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현황 자료를 재제출받음.
-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당연한 책무이며 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전국시도별 초·중고 기초학력 부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전희경 의원실

캠코더 인사, 전교조 비호, 세금 단기 일자리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 교육 행정

주요내용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5명 중 1명(20%)꼴로 낙하산 인사

-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임명 현황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 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 의혹 인사가 심각
-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중 무려 47명(약 20%)이 ‘캠코더’ 의혹 인사
- 자신들이 과거 정부에 했던 비판을 뒤로하고 캠코더 인사 → 내로남불 정부

태풍 솔릭 관통예정 비상상황 시기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시위 위해 상경한 강원, 충남, 전북, 세종 교육감

-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 예정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상황이었음에도 태풍의 직접 관통 지역인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시위 참석을 위해 상경, 해당 지역 학생들 위험 상황 무방비 방치
-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 대응 상황에서 역내를 이탈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위 참석

단기 알바 뽑아서 일자리 착시 일으키겠다는 교육부 : 에너지 지킴이 전형적인 ‘세금 퍼붓기’ 일자리 정책

- 에너지 지킴이란 학생이 직접 교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주로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감시하고 공실의 등기고 수등,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할 예정
- 12월 중순부터는 방학 기간에 돌입해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원 및 학생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약한 데다 에너지 절약은 자발적인 실천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14년 개설 이후 지난해 이용자 수 60% 급감

- 모바일앱 접속자 건은 개설 직후인 2014년 267만 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105만 건으로 60%가량 접속자 수 급감.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비용으로 21억 2천만 원 사용(월별 약 3천만 원 사용)
-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 화면은 캡처가 안 됨.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처를 막아놓음 → 실효성 부족

홍문종 의원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주요내용

| 초·중·고교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

- **(현 황)** 초등학교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대응 방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실시, 이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문제점)** 교실 내 공기 질 측정 결과 ‘나쁨(미세먼지 농도 $80\mu\text{g}/\text{m}^3$ 초과)’ 단계에 해당하는 학교 총 1,205개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 오히려 이산화탄소 2.7배 증가
 - 교육부가 수행한 용역보고서에는 ‘공기청정기 가동 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 교환 장치가 필수”라고 밝혔으나,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공기청정기만 설치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초래
- **(대 안)** 교실 내 공기 질 기준을 우리나라 환경기준(건강의 선제적 보호 기준 농도) $35\mu\text{g}/\text{m}^3$ 에 맞추고, 학교 환경(습도 조절, 공기 정화, 환기 혼합 등)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환기장치(공기교환장치)를 의무 설치할 것을 촉구

|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유지관리 철저

- **(현 황)** 경기도 내 전체 학교 수(총 2,419개교) 대비 인조잔디 운동장 보유 학교 수는 311개(12.9%)
- **(문제점)** 인조잔디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KS품질관리 기준으로 충격 흡수성 50% 이상, 충전재 그루밍은 최초 1년은 연 3회, 이후 7년 차까지는 연 2회 관리
 - 2017~2018년에 조성된 도내 7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의 충격 흡수율 조사 결과, 7곳 모두 KS 품질관리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평균 33%).
- **(대 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

2018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방송장악]** 지상파방송의 편파보도, 정권과 아합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 부각
 - 민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음모 폭로 ▲‘방송사 시청자위에 노조참여 의무화’ ▲‘지상파방송 4社 인사·징계도 노조와 사전협의’ 등 산별노조협약 내용 폭로
 - 文정권의 가짜뉴스 빌미로 ‘표현의 자유’억압시도를 이슈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유튜브 ‘고성국 TV 삭제 사건’ 관련 사과
- **[드루킹 여론조작·포털 횡포]** 이해진과 김범수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드루킹사태와 사이버 갑질의 근원지인 국내 양대 포털 회장인 이해진과 김범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론조작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받음.
 - 네이버의 이해진은 ▲드루킹 재발가능성 시인 ▲매크로 여론조작과 수익의 연관관계 시인 ▲랭킹뉴스 폐지 검토 ▲소상공인들과 협업 및 상생 등을 약속함
 - 네이버 이해진의 매크로와 수익이 관계없다는 위증 관련하여 고발 검토 중
- **[단기 알바 가짜 일자리]** 과방위에서 첫 이슈화 이후 전 상임위로 전파
 - 국감 도중 전 상임위 최초로 과기부 장관의 개입 시인
- **[탈원전 저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라는 혁혁한 성과
 - 원안위원장 사퇴에 그치지 않고, 국회 과방위 차원의 위증죄 고발 및 당 차원의 업무방해죄 고발은 지속키로 함
 - 신고리 4호기 허가 지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 수치 조작과 왜곡, 지역수용성 결과 관련 위증 등 문제점 제시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 확보
 - 탈원전에 급급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라돈 사태 미온적 대처를 공론화
- **[실종된 과학정책]** 무기력해진 국가성장동력 과학정책 실태 여론화
 - 과기부 산하기관 임원중 22명이 업무와 무관한 캠(프)코(드)더(불어)인사인 점을 적발
 - 과기부 연구기관의 R&D예산 비중은 감소, 오히려 간접비용 증가되는 점 지적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간접비 우려 지적에 통감” 답변을 받아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비 삭감저지하고 일부는증액

✓ 평가

- **[드루킹]** 여당의 집요한 반대로 드루킹, 김경수, 송인배 증인채택 불발
 - 향후 전략적 시점에 재접촉 필요
- **[방송장악]** 민노총을 통한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경영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공영방송이 국민방송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함.
- **[탈원전, 실종된 과학]** 文정권의 탈원전, 과학기술정책 실종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정용기 의원실

주요 기관증인 위증 죄 입증 및 공영방송 편파보도 지적

주요내용

| 주요 기관증인 위증 죄 입증

- 한수원 사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지역수용성 평가를 시행했다고 위증한 점을 입증함.
- 우정사업본부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발행을 근거규정 없이 BH(관계기관)와 협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표발행을 할 수 있다고 위증한 점을 입증함. 박정희 대통령 탄생 기념우표발행 취소에 대한 재심의가 절차가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가 있다고 위증한 점을 입증함.

| 공영방송 편파보도 지적 및 방송의 공정성 회복 촉구

-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메인 뉴스 2만 6,581건 보도의 2만 5,526개 단어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 문 대통령 北 가장 많이 언급 / 평문뉴스, 편파방송 확인

| 과거 정책 보복, 국가미래 포기 예산 삭감 시정 요구

-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문재인 정권차원에서 내년도 정부안 1,753억 원을 삭감해 이에 대한 시정요구
- 과학벨트 사업예산이 축소되도 지장이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변에 대한 허구성 지적

金成泰 의원실

文정부의 부실! 무능! 그 민낯을 김성태가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드루킹과 포털의 은밀한 관계, 文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통해 여론조작을 방조한 네이버에 면죄부 주는 정부의 안일한 문제인식과 기술적 무지를 지적
- 드루킹 방조하는 포털과 이를 묵인하는 정부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제2의 드루킹 사태 방지위한 자유한국당 당론 ‘드루킹 방지5법’ 통과 공론화
-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실태조사) 시행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거대포털의 여론조작 방조와 ICT 생태계 폭주 막을 정책기조 마련

| 文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엔 속수무책

- 대국민 사기공약 ‘기본료 폐지’와 국가주의적 통신정책인 ‘선택약정 할인제’ 등 정부의 요금 인가 방식과 인가제의 문제점을 조명
- 국가주의적 통신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인가제 폐지’,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정책기조와 여·야 공감대 마련

| 원안위의 무능이 입증한 文정부의 관리·감독의 민낯

- 탈원전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 된 라돈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라돈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초청하여 피해 입은 국민들의 아픔을 대변
- 국감기간 원안위원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와 이를 수리한 청와대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文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상을 비판

| 文정부의 나팔수도 모자라 전국언론노조의 방송으로 전락한 공영방송

- 공영방송에서 자행되는 정치편향, 국민혐오성 프로그램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조명
-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공영방송이 체결한 산별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 야욕을 공론화

박대출 의원실

어처구니없는 ‘꼼수 정부’ 심판하는 내실 국감

주요내용

|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긴급지침’ 실체 최초 폭로

- “기재부, 공공기관에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 만들어라.’ 긴급지침” (TV조선 10.9)
 - (과기부 국정감사, 10.10) 과기부 장관에게 세금으로 두 달 알바를 채용해 고용지표 마이너스를 막으려 한다는 의혹 제기
 - 장관은 의혹 부인하다, 구체적 증거 제시하자 알바 채용계획 시인. 과기부장관 시인 이후로 ‘단기 일자리’가 국정감사 전체 이슈로 부각
- “정부, 일자리 부풀리려 산하기관에 두 달짜리 알바 채용 압박” (중앙일보 10.10)
 -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자랑한 날, 알바만 대폭 늘린 경제팀” (중앙일보 10.11)
- 한국당은 ‘가짜일자리 대책 특위’까지 만들어 대응
-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두 달간 단기 일자리에 500명을 뽑기로 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없이 국민 혈세 19억 원 낭비

| 현 정부 ‘가짜뉴스’ 대책 문제

- 가짜뉴스 판별을 위해 알고리즘 개발하겠다는 사실 적발
- 알고리즘으로 가짜뉴스 판별은 불법적이라고 과기정통부 추궁

| 민생·현안 문제 지적 및 제도개선

- 유료방송 셋톱박스 대기전력 문제(소비자선택권 약관 개정)
- TV·데이터 홈쇼핑의 여행상품 선정기준 문제(선정기준 마련)
- 임의로 대북방송 출력 낮춘 KBS 전파법 위반사실 적발(검사제도 변경)
- 보안 취약성 입증된 중국산 CCTV, 원전·정부청사 설치문제

|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등 문제 지적

-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 불안과 원전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
- 현 정부의 탈원전을 등에 업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계 장악문제 지적(비전문성과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의 원자력계 장악으로 정작 원자력 안전성 저해, 본연의 기능 회복 주문)

박성중 의원실

민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문제, 네이버의 매크로 조작 여전히 무방비 등

주요내용

민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

- 시청자위원회와 산별노조협약 등을 통한 민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 폭로
- 실제적 증거로 문화방송의 사장 이하 고위직 100% 노조원 출신의 편향 인사
- (언론보도) 방송사 시청자 쏠에 노조 참여 의무화 (조선일보, 10.6)
지상파 방송 4社, 인사·징계도 노조와 사전 협의 (조선일보, 10.10)
MBC, 간부가 평사원의 2배 (조선일보, 10.26)

네이버의 매크로 조작 여전히 무방비

-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종합국정감사 증인 출석 시, 네이버에 대한 매크로 조작 동영상으로 시연
- 지난 대선 기간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에 대한 매크로 조작으로 여론 호도 등 국기문란 상황에 대해 네이버가 방조했다는 문제 강력 제기

청년 TLO 육성사업, 가짜일자리 만드는데 468억 혈세 낭비

- 계획 없이 급조한 ‘청년 TLO 육성사업’, 혈세 468억 원을 들여 월 180만 원을 6개월 동안 4,000명에게 지급하지만 취·창업 연계 가능성 낮아 청년 실업률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 사업임을 지적
- 현장 점검과 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사업 재점검 필요
- (언론보도) 박성중 “과기정통부, 가짜일자리 창출에 세금 낭비” (뉴시스, 10.23)

과기부의 4차 산업혁명 준비 결여 : 공인인증서

-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 취지로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공공부문에선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방식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
- (정책대안) 정부발의안에 포함된 부칙에서 ‘실지명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본래 법의 취지대로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인증 보안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해 주어야 함.

송희경 의원실

사이버 보안 무방비, 탈원전, 청년 올리는 정부

주요내용

| 사이버 보안체계의 허점 지적 : 위조지문으로 스마트폰, 결제페이 다 뚫린다!

- 위조 실리콘 지문으로 아이폰, 삼성페이 지문인식 해제 시연, 생체인증 허점 지적
- 어둠의 구글,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 '쇼단'에 국내 IoT기기 취약점 노출 시연
-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 가능하게 하여 보이스피싱의 통로가 되는 SIM박스 제재 필요 지적. 2000달러에 팔리고 있어 단속시급.
- 블록체인 기반 지문인식 전자신분증 구축 필요

| 탈원전 논리의 허구성 질타 :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답정너' 보고서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용역 보고서'의 '판매단가'에 대한 수치 조작과 왜곡 지적,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지적
- 한수원은 원자력 판매단가를 원가(53원)보다 낮은 51원으로 책정, 매출 850억 원을 줄여 '경제성 없다'고 판단,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
- 경제성평가 재검토 촉구, 수치 왜곡 일삼는 정부 탈원전 정책 허구성 증명

| 라돈 공포! 손 놓고 있는 대국민서비스 지적 : 라돈측정기 전국에 10대뿐

- 원자력안전재단 보유 라돈측정기를 시연하며 전국에 10대 뿐임을 지적, 정확한 라돈 측정 원하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질타

|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의 민낯 : 월급 상납받는 나쁜 일자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 중인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이 연구원들에게 월급상납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로 변질. 한 석사 연구원은 월급 1,000만 원, 박사 연구원은 월급 600만 원을 채용된 기업 대표들에게 상납함.
- 사업의 부실한 기업 선정과정, 미흡한 운영능력,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 질타, 사업 관리자 행정 조치와 부처의 전수조사 조치를 약속받음.

| 방송편향 심각성 지적 : 케이블 TV부터 공영방송까지, 편향 방송 만연

- 북한 미화, 특정정파 정치인 조롱, 공영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정부정책옹호·정부정책비판 언론에 일방적인 비판 하는 방송행태에 대한 지적

| 진화하는 온라인 흥신소! : '유흥탐정' 방통위·방심위는 수수방관

- 개인정보 악용, 사생활 침해하는 '유흥탐정'에 대한 방통위·방심위 대응 촉구

윤상직 의원실

과기부 캠퍼스 인사 재검토 및 탈원전 감사원 감사 촉구 등

주요내용

- | 과기부 산하기관 임원 중 22명이 캠퍼스 인사로 기용 등 국가 전문영역에 非전문가 기용 너무 많다는 점 지적
 - [성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소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는 답변 이끌어냄.
- | 원안위, 한수원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월성 1호기 정기검사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조기폐로 수순을 밟는데 일조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 | 네이버의 플랫폼 중립성 위반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를 촉구
 - [성과] 네이버의 플랫폼 중립성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통위원장의 답변 이끌어냄.
- | 과기부 소속 출연 연구기관의 직접 R&D 예산과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간접비용은 증가하는 점과 사업비 횡령 등 연구윤리 문제의 심각성 지적
 - [성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간접비 우려 목소리에 통감하며 각 연구기관이 간접비를 합칠 수 있는 부분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 |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허위방송보도’ 관련 방심위 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된 점 확인. 해당안건에 대한 재심 강력 촉구
- | 차세대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핵융합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
- | 두뇌유출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과 카이스트의 원자력학과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점 등 우수 과학기술인재 육성 대책 마련을 촉구
- |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보편요금제 도입은 통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점 지적

최연혜 의원실

가짜가 판치는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의 가면을 벗기다!

주요내용

| 기관장급 인사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文정부 인사 적폐 드러나다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안위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 밝힘.
 - 3년 이내, 원자력연구원 사업 참여사실 확인(당연퇴직 해당)
 - 29일, 위원장 자진사퇴 이끌어 냄.
-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가톨릭평화방송 발전위원회 위원 이력을 고의로 누락·은폐한 사실 확인
 -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종사자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례 및 방통위 선례에 따라 당연 퇴직 대상임을 밝힘.
 -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

| 文정부의 고용통계 마사지 전략 = 단기 알바 + 유령 연구원

- 문재인 정부는 여러 고용지표가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되자 '긴급', '초긴급'이라는 제목으로 공공기관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고하라고 압박
- 몇몇 공공기관은 채용 계획도 없고, 예산 사용 근거도 없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고,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소속 연구원에 2달짜리 단기 일자리 500개를 만들라고 통보함을 밝혀냄.
- 일부 R&D 수행기관은 오류투성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자리 실적을 집계하고, 기 취업자를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집계해 정부에 보고한 것을 밝혀냄.

| 옛장수 마음대로 만든 가짜보고서

- 2030년 전기요금인상률 산정근거가 된 보고서가 엉터리 보고서임을 밝혀냄.
- 태양광 투자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비용 산정 및 외부비용을 미반영하여 발전원가를 낮춘 반면 원전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위험비용 등을 반영하여 발전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였던 것을 밝혀냄.

2018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비준으로 위헌논란 야기
- 대북제재 완화 전도사 자처한 이번 유럽순방 최대 성과는 국내에서 잊혀진 북한인권문제와 CVID를 확인한 것뿐
- '5.24 조치 해제' 기정사실화 꿈수 부리다 논란만 야기
- 북한 석탄 수입 관련 관세청의 거짓말과 정부의 직무유기
- 교황 방북이 성사된 듯 자화자찬 호들갑 댄 정부의 후안무치
-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뺑뺑이로 드러난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적 문제점
-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 대북 저자세 태도로 국민 자존심 짓밟고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정부
-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가속운전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이행 여지 의심받아
-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배제 방침 고수하는 인권유린 통일부 장관
-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오락가락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부의 위헌적 태도

✓ 평가

-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례 제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와 대북 저자세 태도 및 대북제재 이행 의지 의심을 자초하는 국익과 국민을 잊은 정부의 한심한 '북한 바라기' 행태를 여실히 지적해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냄
 - 단,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과다 비용과 관련하여 통일부의 자료요구 회피로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 북한 석탄 수입의 실제 파악을 위한 핵심 증인 채택에 대한 여당의 방해로 구체적 실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강석호 의원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先 북한의 비핵화,
後 대북제재 완화 요구

주요내용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및 남북군사합의 비준 위헌여부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주권제약’,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국회 비준동의를 먼저 거쳐야 하며,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정치적 약속’일뿐이라 대통령 비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함.

|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조치 발언의 진위여부와 북한비핵화 용어 정리

- 국감 첫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에 파행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위원장으로서 “5.24 제재해제 검토에 대해 여러 번 장관이 사과했고, 정부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이 명확한가”라고 확인 후, 강 장관이 인정하면서 진화하고 여야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감을 진행
- 북한의 비핵화 용어인 CVID, FFVD, CD의 의미와 내용을 정의하고 용어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비핵화 용어의 통일을 요구함.

| 통일부 장관이 정작 통일 언급 안 해

- 조명균 통일부장관 임명 이후 연설문과 발언자료 및 기고문 분석결과 올해 67회 연설 가운데 ‘통일’을 언급한 횟수는 57회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 중 통일철학에는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히 밝히고 있는 통일의 철학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나”고 질책

| 남북협력과 대북제재 문제는 韓美가 보조를 맞춰야

- 유엔한국대표부 국감에서 조태열 대사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음.
- 주미대사 국감에서에서는 미국 승인없이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조윤제 주미대사 의견을 물었고 “트럼프 ‘승인’ 발언은 오해 같다”는 답변을 받음.
- 해외 재외공관 국감을 통해 대북제재와 남북협력과 관련 한미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요구함.

정양석 의원실

여야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필요

주요내용

| 국민 신뢰 얻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협상 과정

-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美 압박하는 모양새
 - 문 대통령, 뉴욕에서 제재완화, 종전 선언 등 6개 상응조치 언급
 - 외교부 장관, 외신 인터뷰에서 “美는 北핵리스트 요구 미루고, 종전선언 - 영변 핵폐기 맞교환 하라” 중재안 제시
- 외교부 장관이 오히려 비핵화 메시지를 더 혼란스럽게 해

|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총사업의 ‘비용추계’ 요구

- '19년 필요예산 4,712억만 제출한 것을 ‘꼼수비준’이라고 지적하고 비준동의안 심사를 위한 전체 비용추계 제출 요청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의 경우 약 50조 원(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토교통부 건설 단가표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비용추계가 제출되지 않으면 비준동의안 심사가 불가함을 지적

|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비 '18년 기금집행지침 및 '국고금관리법' 위반 지적

- '18.9.14 기금운용계획 변경 전 개보수 물자반입 등 지출원인행위(7.4)

| 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남북협력기금 심의 '거수기'로 전락

- 교추협, 평창올림픽 北 대표단 지원 등 180억 규모의 先집행 → 後의결
- 위원 18명 중 민간위원이 5명이며 이들 중 4명이 친여 인사여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로 전락

김무성 의원실

북핵 폐기, 한미관계는 뒷전... 北대변인 노릇에, 남북관계 과속 하는 정부 질타

주요내용

| '5.24조치 해제 검토' 및 '금강산관광 대북제재 위반' 지적

-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주무부처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
- 통일부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이 대북제재 대상인가'를 물었고, '대규모로 (관광이) 진행되거나 대규모 현금이 들어가면 제재대상'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냄.

|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 비준은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

-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 군사합의서의 내용은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안전보장과 직결되고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
- 대통령의 비준만으로 끝내려고 한 것은 분명한 위헌임. 정부가 이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임을 지적

| 선부른 종전선언이 가져올 결과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뿐

- 정부는 '핵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 등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해주면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 폐기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함. 이것은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도 인정받고 제재도 완화하려는 작전에 끌려가는 것임을 지적
-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의 선행 단계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의도임을 지적

| 한미 간 계속되는 엇박자, 한미동맹 균열 우려

- 정부가 종전선언, 남북군사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철도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등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입장차를 보인 것을 우려
- 당면 과제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선 북핵폐기'라는 방침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 남북관계에 고속페달 밟고 있는 정부 질타

| '사람이 먼저'라는 文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외면, 탈북민 취업 소홀 지적

- 평양에 가서 대북 지원 약속은 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는 정부 질타
- 스스로 구직하고 있는 탈북민이 76.8%, 정부 기관을 이용한 구직은 6.6%에 불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좀 더 관심 가지길 당부

김재경 의원실

남북관계만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외교실패는 곧 경제실패

- 방위산업을 대표적인 적폐로 인식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력을 동원하였으나, 모두 무죄로 종결.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 발생
- KAI의 미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수주 실패, 외교가 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 국가적 위기가 초래. 철충교역의 대상인데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은데 영향

| 국제경제동향 파악, 해외사례를 보고하는 것도 외교부의 임무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실패로 경제위기 초래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력 손실이 예상되는바, 원전수명을 연장하는 선진국에 반하여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

| 낙관적인 비핵화 전망과 대한민국의 위기

- 값비싼 경협비용만 부담. 북핵 위협은 여전한 최악의 상황 상정해야
- 핵 폐기 첫 단계인 핵 리스트 제출조차 거부. 비핵화 자신하는 근거는?
- 국제사회는 확고한 '先비핵화'입장, 先제재완화 외면
- 비건 美 대표 방한에 따른 한미공조와 비핵화 진행 상황 설명 주문
- 대통령의 대북제재완화 설득 외교 활동. 자신감 있었던 근거는?

| 남북화해 모드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북한 인권

- 북한인권재단 설립 늦춰진다면 사무실 폐쇄하고 예산도 전액 삭감
- 북한인권결의안 UN상정 시, 우리정부의 입장과 비핵화에 미칠 영향은?

|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대통령 비준 논란

- 국회비준을 요청한 판문점선언은 국회계류 중인 가운데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대통령이 비준한 데 따른 여러 문제 지적
- 북핵폐기 없는 안보주권 해체가 가져올 위험성 지적

원유철 의원실

외교부 : 해외 수감된 우리국민 영사조력 못 받고 방치
통일부 :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 비준은 국회무시 처사

주요내용

| 전 세계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 영사조력 규정 이행 촉구

- 현재 전 세계에 수감된 우리 국민은 1,317명임. 그런데 최근 4년 누적 7,126명 중 337명은 연 1회 영사 방문면회도 못 받고 있음.
- 대사관 11곳(16%), 총영사관 15곳(38%), 총영사관 출장소 3곳(75%)의 수감자는 영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외교부는 분기별 재외수감자명단 요청 의무 불이행 개선하고 현재 연 1회의 영사방문면회 업무 지침을 연 2회로 개정할 것을 요구

| 대통령 ASEM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국제사회는 우려 목소리

- 대통령은 유럽 5개국 순방과 ASEM 회의 참석 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유럽 정상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보도됨.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영국 메이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모두 북한의 CVID를 강조하며 북한의 확실한 행동을 요구함.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유럽의 공조가 깨질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외교부가 우방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요구

|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서 비준은 국회 무시 처사 규탄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
-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를 담고 있음.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이 진행 중임에도 후속조치가 비준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북핵 폐기 없이 남북경협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군사 합의서는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음을 지적

유기준 의원실

북한 핵 폐기보다 남북관계 진전에만 몰두하는 정부

주요내용

| 북한산 석탄 반입, 대북제재 이행 의지 부족 질타

- 청와대, 북한산 선박 관련 수사에서 경찰 배제한 이유 추궁
- 진통호가 반입한 무연탄, 의혹 많은데도 관세청에서 결국 통관시킨 이유 추궁
- 관세청과 남동발전의 엇갈린 진술 지적 및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지적

|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에 체결 이후, 정부의 남북경협 과속 제지 및 대북제재 이행 촉구

-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지적
-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우리 경찰자산의 약화 및 NLL 관련 일방적인 양보 질타

|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대변인 수석대변인 노릇 질타

- 전 세계가 북한의 핵 폐기 촉구하는데도 나홀로 제재완화 주장하고 있는 정부 질타
- 대통령 유럽 순방, 유엔 안보리 이사국 정상 및 교황에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 노릇 질타

| 대북차관 상환, 남북의제로 다루고 상환 촉구할 것을 촉구

- 식량,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경공업 차관 등 총 9억3천294만 달러에 달해
- 식량차관 26회, 경공업차관 24회 상환촉구에도 북한은 무응답인데 정부의 상환촉구 노력은 미흡함을 지적
- 수출입은행 서면 통보방식 대신 통일부가 직접 상환 촉구할 것을 주문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한 통일교육지침서 활용 부적절 지적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삭제하고 북핵 위험성 왜곡한 교과서 내용 지적
-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보관 확립 저해한데 대한 문제제기
- 헌법 거스르고 대남 위협 축소하는 잘못된 지침서 즉각 수정 조치할 것을 요구

윤상현 의원실

김정은 집권 6년간 사치품 수입에 40억 달러를 썼다

주요내용

-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6억4,078만 달러의 사치품을 수입해 선물통치에 이용. 이는 올해 북한식량 부족량(80만톤)의 2배인 165만 톤의 쌀을 살 수 있는 규모로, 북한의 식량부족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주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
- 문제는 중국의 제재 구멍.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막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국내외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선전하는 역주행 중

| 세계 언론매체 보도

- North Korea bought at least \$640 million in luxury goods from China in 2017, South Korea lawmaker says 【Reuters】 영국
- ぜいたく品の輸入、正恩体制下4500億円【朝日新聞】 일본
- Kim Jong-un ‘has spent \$4bn on luxury goods’ since coming to power, South Korean MP says 【The Independent】 영국
- Rolls Royce, ordinateurs, cognac... Kim Jong-un dépenserait des milliards en produits de luxe 【Le Figaro】 프랑스
- 金正恩執政6年花40億美元買奢侈品【中時電子報】 대만
- North Korea ‘bought at least \$640 million in luxury goods from China in 2017’, in defiance of UN sanctions 【The Telegraph】 영국
- North Korea Bought at Least \$640 Million in Luxury Goods From China in 2017, South Korea Lawmaker Says 【U.S. News & World Report】 미국
- Corée du Nord: 4 milliards de dollars en produits de luxe importés depuis 2012 【RFI(Radio France Internationale)】 프랑스
- Korea Utara Disebut Impor Barang Mewah Senilai Rp 9 Triliun dari China 【KOMPAS】 인도네시아
- Navzdory sankciím. Kim Čong-un nakoupil luxusní zboží za čtyři miliardy dolarů 【denik.cz】 체코
- A nép éheznek, de Észak-Korea diktátora 6 év alatt elvert 4 milliárd dollárt luxuscikkekre 【hvg.hu】 헝가리
- L'incroyable train de vie de milliardaires des dirigeants nord-coréens 【BFMTV.COM】 프랑스
- Kim Jong-un se desfătă în timpul sancțiunilor cu cogniac și mașini de lux 【Romania Libera】 루마니아
- Kim Jong UN spent \$640 million on the acquisition of luxurious items regardless of sanctions 【News Egypt】 이집트

정진석 의원실

문재인 정부, 한미공조 균열에 모자라 對北 低자세!

주요내용

| 한·미 동맹에 균열 확인(외교부 국정감사)

- 한·미 양국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 이에 美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냐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사실임을 시인
-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 양국 간 이견이 없다고 말해온 것이 거짓으로 드러남.

| 북한산 석탄반입 대금의 송금 확인(외교부 국정감사)

- 증인으로 출석한 관세청장으로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대금이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송금됐음을 확인
- 작년 10월이면 미 정보기관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수입에 대한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고,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으며, 세 차례의 관계부처회의가 진행됐던 시기
- 이 시점 이후 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누장 대처, 부실하게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 對北 低자세로 일관하는 통일부(통일부 국정감사)

- 지난 10월 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회담에 늦게 도착하자 북한 리선권이 조 장관에서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 된다.”고 발언
- 지난 10월 15일,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우려해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배제
-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 리선권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면박을 준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확인받음.
- 상처받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는 관심 없이 시종일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통일부의 低자세를 질타

2018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이번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해 온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의 문제점과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합의내용 및 현 정부의 안일한 안보 인식에 대해 국감 내내 감사위원들이 팀워크를 발휘하여 집중 질의하며 피감기관들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냄.
- 특히 국감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미사일 시험발사 연기, 포 사격훈련 중단' 등 우리 군의 독자적 훈련마저 대북관계를 의식한 '현 정부의 지시'에 의해 연기 또는 중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감사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이뤄졌고 각 군부대를 포함해 최전방 GP, 백령도 군부대 방문 등 안보 현장 점검을 통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했으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 결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당 국방위 감사위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기조로 인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지적하였고 아울러 보완책도 함께 제시하면서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정신적 무장과 함께 철저한 안보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당부함.

☑ 평가

- 이번 국감을 진행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합참의장, 각 군 주요 지휘관들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모두 한목소리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정권의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安危만 생각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다들 문제없다고만 하니 그들의 답변처럼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고 아쉬웠음.
-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줄줄이 중단, 3축 체계 구축 지연, 군사 분야 합의로 인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제약 등으로 인해 군사대비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음.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안보 정당으로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나갈 것.

백승주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對北군사대비태세 약화 및 안보 포폴리즘 행태 지적

주요내용

|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前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2건) 'II급 비밀' 입증

- 기무사가 계엄 관련 문건이 제19대 대선 이후 정상적으로 비밀생산 결재(5.10일)를 받아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된 입증 자료와 문건 작성 관련자 관련 진술 확보 및 공개

| <합동참모본부>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北, 남한 주장 서해 NLL 불인정, 북한 주장 경비계선 정당성 강조 지적

-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측 주장 경비계선 정당성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정보 및 백령도/연평도 어민 진술 공개

→ 9.19 남북군사합의로 전략자산 무력화 및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 능력 약화 지적

-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전방사단 및 군단급 정찰자산(UAV) 무력화 및 북한 도발 시 근접항공지원(CAS) 신속 지원 불가능 지적

| <국방부, 방사청>

→ 靑, 자위권 차원 방어무기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고의적 지연

-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 눈치 보면 3축 체계인 KAMD 핵심 전력인 L-SAM 탐색 개발을 위해 예정된 비행시험 올해 초부터 연기 지시

| <방사청>

→ 핵심부품 부적절한 계약방식으로 방산 기업에 책임 전가하는 방위사업청

- 방사청이 핵심부품을 '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추진해 전력화 지연 초래 및 체계업체에 수천억 원의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예, K-2 전차) 사례 감사원 감사청구

| <육해공군>

→ 간부 보충 피복 관리 허점으로 국민 혈세 낭비 지적

- 병사들 피복 보급에는 관심 없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부들의 실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리 부실로 189억 원의 누적 재고를 발생시키는데도 매년 300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지적

| <해병대>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치 활동하는 자' 자문위원 해촉 촉구

- '17년 국정감사 결과('정치 활동을 하는 자'를 국방부 및 각 군 자문위원 해촉 사유로 명시) 未조치 지적 및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해촉 촉구

| <병무청>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특기봉사활동 관리·감독 기능 미흡 지적

- 예술·체육요원은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의무를 특기봉사활동으로 대체 복무하는 만큼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관리·감독 부족

김성태 의원실

**군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주요내용

<국방위원회>

| 국방분야 산하기관장마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차지!

- 국방기술품질원 이창희 원장은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안보특보, 국방안보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1차 취업 심사 '불승인' 이후 한 달 만에 '승인'으로 변경된 배경에 의혹
- 김성태 의원은 “공모를 통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기품원장직이 절차적인 요건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선 보은 인사를 실시하다보니 공모 절차도 취업 심사도 모두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

| KFX사업 지연으로 노후전투기 연장운영,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없나?

-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당초 목표대비 2년간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서, 교체 예정이던 노후전투기(F-4/F-5)를 5년간 수명 연장해 운영 중
- 김성태 의원은 “운행시간 기준 당초 설계수명대비 3배까지 연장운영 할 경우 과연 전투기의 성능이 담보될 수 있는지, 또 조종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얼마 전 마린은 헬기 추락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의 안전성 확보에 군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 국방부소속 군인들, 성범죄혐의 수사받고도 기소율은 50%도 안 돼!!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방부 및 직할부대 소속 군인 성범죄 피의자의 56.3%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공군이 20.9% 불기소 처분율을 보인 것보다 2.7배 이상 높은 수치고, 육군이 29.3%의 불기소 처분율을 보인 것보다 큰 차이
- 김성태 의원은 “국방부와 직할부대 군인들의 성범죄 기소율이 다른 육해공군 소속 군인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또 하나의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 아래 소속, 계급과 상관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군내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

김성태 의원실

주요내용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 비서실

- 임종석 비서실장의 DMZ 시찰 및 군사 보안 사항이 포함된 영상의 유튜브 게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음.
-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무례한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
- 소득주도성장론의 전제와 작동 방식의 오류를 논박하고, 경제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장하성 정책 실장의 현실 인식에 대해 문제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 '북한 성폭력 실태 보고서'(HRW)를 소개하고, 12월에 UN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에 대한 부처 수용률 및 진정 사건 권리구제 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주문
-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인선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

| 국회 사무처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사전에 등록하면 국회 청사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반면, 국회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갔을 때는 별도로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출입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기관 간 협조 필요성을 지적
- 입법조사처 연구원의 급여 등 처우가 열악하여 핵심 전문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만큼 전문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지위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회사무처 출신의 간부 임명이나 직원 간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문
- 미래연구원의 운영 계획을 일신하고 “미래”를 “연구”하는 “국회” 연구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주문

이종명 의원실

9.19 남북군사합의로 국군력 박탈되었다! (국방위)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여성가족부! (여가위)

주요내용

<국방위원회>

| GP 철수 시, 北 기습남침에 무방비

-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전방의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GP가 과거 북한의 땅굴 예상 축선에 위치해 있어, 만약 북한이 땅굴 기습을 가한다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전략
- GP 1~3호 철거로 인한 문산 축선, 화살머리고지의 철원축선으로 북한군이 수도권까지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위험성 내포
- 땅굴 침투대비 제한, 수도권 고속남침 통로제공, DMZ 감시 공백 확장, DMZ 계획 도발 확대가 우려되는 GP 철수에 대해 신중한 추진 요구

|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올 들어 7배 급증!

- '13~'17년까지 5년간 해체된 대전차방어시설은 9개소에 연평균 1.8개소에 비해 '18년도에만 해체되거나 계획된 대전차방호시설은 13개에 달함.
- 대전차방호시설 해체에 따른 대체 장애물 설치 또한 50%에 불과함.
-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방어책 임에도 文정부에서 과도하게 해체하여 국가안보의 무장해제를 스스로 좌초함.

| 4,000억 투입, 軍 무인기 개발사업! 남북군사합의로 무용지물!

- 전방사단에 배치 예정인 사단정찰용 UAV! '낙동강 오리 알' 신세로 전략
- 군은 11월부터 최전방 전력화 계획을 세웠지만 남북군사합의로 실질적 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육 훈련용으로만 활용

| 남북군사합의로 해상사격 훈련하러 山 간다!

- 서북도서 포 사격훈련을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사거리 문제로 실질적 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됨.
- 육지로 옮겨 사격 훈련에 나서도 기존 사격장에 대한 내륙 부대 훈련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 발생

<여성가족위원회>

| 청소년 에이즈 증가, 동성애가 원인!

| 여가부 '고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추진, 기업 활동 위축!

| '청소년유해음반물' 관리 엉터리! 들을 수 없지만, 부를 수는 있어!

| '아이돌봄서비스', 12년간 실태조사 全無!

이주영 의원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나타난 우리군의 일방적 무장해제 지적, 핵잠수함 건조 추진 필요, 마린온헬기 추락사고의 철저한 조사 촉구

주요내용

■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나타난 우리 군의 일방적 무장해제 지적

- 애매모호한 구역 설정으로 서해 NLL 무력화, 군사분계선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감시 정찰 기능 약화, 포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 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고립화, 국군의 전선을 허무는 GP 철수 등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곳곳에 나타난 우리 군의 무장해제 비판
- 비대칭 전력인 핵과 생화학 무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등 북한이 우위에 있는 전력은 그대로 합의를 검증할 조항이나 투명성을 보장할 수단이 전혀 없음을 지적
- 국군만의 군비 통제는 일방적인 안보주권의 해체임으로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재협상 촉구

■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추진 필요

- 지난 4월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에 대한 용역 종료 결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가능 확인
- 해군에서도 자체 방어 전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수함 필요성 공감
- 핵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이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조속한 건조 추진 필요성 강조

■ 마린온헬기 추락사고, 철저한 조사 촉구

- 중간발표 결과, 마린온헬기 추락 원인이 ‘로터마스터 균열’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이 남은 만큼 조사위는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최종 결과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
-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국방위 조사소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헬기 진동 수치 초과와 탑승자 인원 규정, 소방 안전 문제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사소위에서 검증하기로 결정함.

정종섭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군사합의·국방개혁 지적

주요내용

| 국방부 '일과 이후 장병 휴대폰 전면적용'의 치명적 문제점 지적

- 국방개혁2.0으로 내년 '일과 이후 장병 휴대폰 전면적용' 위한 시범부대 운영 중이나, 휴대폰 통제 어플은 장병 상당수 쓰는 아이폰 제어 불가, 직접 시연
※ [SBS] 18.10.9. 병사 휴대전화 통제를 위한 '보안 앱', 아이폰엔 무용지물
- 휴대폰 상당수 통제 못 하는데 국방부는 병사휴대폰 관리 규정도 만들지 않고, 시범부대는 개인 관물대에 휴대폰 보관, 취침시간 이후에도 악용 가능
- 벌써 시범부대에서 휴대폰으로 사설도박자 발생, 병사의 비밀엄수 위반도 2014년 2,700건, 2015년 3,856건, 2016년 4,046건, 2017년 4,744건으로 매년 증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 장병 휴대폰 사용, 재검토 역설
※ [한국일보] 18.10.11. [단독] 사병들 휴대폰 보관 부대마다 제각각... 보안 위반 속 출구

| 대통령의 '北 NLL(북방한계선) 수용' 주장, 허위사실 증명

-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며 '마치 북한이 앞으로 서해 기준선을 NLL로 할 것' 인양 대서특필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임을 증명
-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늘 주장해오던 그들의 기준선을 포기했느냐'는 질의에, 합참의장은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북한은 아직도 서해경비계선을 주장 중인 사실 확인
- 북측 군사분야합의서 자료 제출 요구, 열람 결과 북측 군사분야합의서에는 《북방한계선》로 쌍꺼쇠 표기, 이는 주로 '소위 무엇이다' 는 의미로 사용해, 군사분야 합의서에 등장한 표현만으로 북한이 NLL 수용 주장은 허구 증명
※ [중앙일보] 18.10.26. 남북합의 北 서명본엔 《북방한계선》...쌍꺼쇠 무슨 뜻?

| 승선근무예비역의 참혹한 복무실태와 병무청의 늑장 대처 고발

- 5년간 3년 이상 승선해야 복무 인정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乙 중 乙, 올 3월 끝없는 괴롭힘에 구모씨 자살, 각종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증언 쏟아짐.
- 최근 5년간 승선근무예비역 산업재해 현황, 사망·실종·심각한 상해 수십 건
- 병무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함에도 사망·실종자 발생에 대한 업체 항의 및 징계 조치 없었고, 구모씨 자살 이후 7개월 뒤에야 집중 관리 훈령 개정 지적

황영철 의원실

문재인 정부, '자주국방' 아닌 '나 홀로 국방' 추진으로 심각한 안보 공백 우려!

주요내용

|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안보 포폴리즘 횡행과 한미군사동맹 약화 우려

- 무리한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안보 포폴리즘의 전형적 사례
 - 병역자원 감소 추세 악화시켜 군 병력 50만 명 선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 국방개혁 2.0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자주(自主)' 조급증의 산물
 - 군 정찰위성 확보 등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 능력 확보 이전, 現 정권 임기 내 전작권 조기전환 추진은 한미연합전력 및 한미군사동맹 약화로 이어질 우려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문제점 :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을 혼동하는 안보 낙관주의의 산물

- 비핵화 협상과 병행되지 않은 '별개의' 군사상 합의는 무의미
-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및 '우발적 무력 충돌' 개념은 북한 중심적 사고의 산물
- 상호 적대행위 중지 관련 조치는 「방어」조차 허용치 않는 사실상의 무장해제
-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한 군축은 힘을 통한 평화달성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과 모순

| (구)기무사 폐지 및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이후 핵심과제

- 同 조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의 의지 그 자체

| 일관성 있는 군 전력증강 사업 추진의 필요성

- 각 군의 전력화 시기를 준수하고 방산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 접경지역의 민·군 상생을 위한 지역 여론 수렴기능 강화 촉구

| 안정적 부대 관리와 군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필요

2018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총평**✓ 핵심성과**

- 청년들의 꿈을 농락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공무원 17만 여명이 늘면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만 92조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처 추산 결과 드러났으며, 정부의 급조된 단기일자리 확대 정책은 결국 국민을 알바로 내모는 졸속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 평가

-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요즘, 특히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 국민들은 고용세습형 채용 비리 의혹이 서울교통공사에만 있었겠는가 하는 냉소와 불신이 팽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좋은 취지의 고용정책이 이렇게 변질되고 부도덕한 고용세습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에 분노.
- 정부가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여 명을 늘릴 경우, 30년간 지급될 급여가 327조 원이고 퇴직 후에도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이 9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밝혀져.
 - 공무원이 필요해서 늘리는 것인지 '일자리 공약'을 지켰다고 주장하기 위해 증원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이런 무리한 공무원 증원의 부담은 이 정부가 아니라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것.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부담은 후세인 미래세대에 지우는 일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부가 반드시 피해야 할 포퓰리즘.
-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하여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기 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할 직원 채용에 안전을 실종시킨 일종의 사회악. 이번 고용세습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이며,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국회가 서울교통공사 등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이채익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채용 비리’ 문제 살살이 밝혀내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연금만 92조 원 추가 부담

-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文 공약대로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시 공무원연금 지급으로 국민 1인당 평균 440만 원 부담, 약 92조 원 추가 부담 밝혀
- 이채익 의원 질의에 인사혁신처는 국감기간 내 공무원 추가 증원에 따른 연금 추가부담액 추계 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결과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라 정부가 추가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액이 약 21조 원이라 제출
- 인사혁신처는 실제 공무원 충원 인원 중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 731명을 제외 하고, 10만 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

‘친인척 고용세습·노조원 끼리끼리’ 서울교통공사·대전도시공사 등 ‘일자리게이트’ 채용 비리 문제 밝혀

-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노동·친민주노총, 보궐선거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 문제와 文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뒤섞여 고용세습 등 대규모 채용 비리 문제 비판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해고된 민노총 간부 30여 명 재입사, 이 중 10명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남. 서울교통공사를 선거 논공행상에 이용하며 고용세습 ‘일자리게이트’ 문제 야기 지적
- 대전도시공사, 지난해 5월 이후 채용된 입사자 중 7명이 공사 노조원 자녀 또는 형제·자매. ‘일자리게이트’ 국정조사 및 전수조사 요구

‘화재수사권’, 경찰 아닌 전문성 갖춘 소방이 가져야

-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주원인을 부실한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대처시스템이 아닌 스리랑카인이 날린 ‘퐁둥’으로 지목한 것은 화재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화재수사권’을 가졌기 때문
- 소방당국 매년 약 4천여 건 화재수사보고서 경찰에 제출, 행정력 낭비 심각
- ‘화재수사권’ 조정을 위해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머리 맞대길 주문

김영우 의원실

정부 일자리로드맵 부실 증명과
상위법 위반 자치법규 관리제안

주요내용

| 정부 일자리로드맵 부실 증명, 전면 재검토 요구

-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계획을 담은 일자리로드맵 작성과정에 있어 공무원 인사와 연금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제외 확인함.
- 공무원 증원 소요 예산 17조 원은 공무원 교육·필수장비 예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당해연도 단순 인건비임을 확인함.
- 현장 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경찰·소방 특정직(2%)보다 일반직(4.1%), 정무직(5.5%), 별정직(45.3%)의 증가율이 훨씬 높음을 증명
- 위와 같은 팩트를 통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광주시(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일자리로드맵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

| 지역 화폐 개선 방안과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관리 방안 제시

- 민선 7기,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 화폐 도입 붐.
- 강원도 및 경기 성남시는 지역 화폐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이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령(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증명
- 지역 화폐 사례처럼 상위법령 위반한 자치법규에 대한 행안부의 전수조사 요구 및 자치법규 제·개정 시 법제처 등 전문 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제안
-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에 동의·공감하며, 성남시 등에 지역 화폐 임금 지급 중단 조치 이끌어내는 한편, 자치단체 파견 법제처 법제협력관 활용방안 제시

|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평가 및 노조 패밀리 전수조사 요구

- 광역별 지방공무원 재정순위(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손이익) 발표
-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화 비판
- 지방 감사와 종합감사 통해 지방공기업 노조 패밀리 전수조사 요구

|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국가관이 불확실함을 확인

송언석 의원실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 본질을 꿰뚫다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증원 산출 근거 및 지방재정부담 가중 지적!

- 지방공무원 67,500명 증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5년간 9.5조 원으로 추정
- 이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관련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질의

| (경찰청) 경찰, 불법 시위에 원칙 세워야 한다!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중총궐기집회 등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토록 권고
- 그러나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집회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적 권한도 없는 편향된 위원회인 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들의 월권행위를 막아야 함.

| (인사혁신처) 우물쭈물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 추계하라!

- 2017년 추경 부대 의견에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을 추계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처 등 국회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만 하고 있음.
- 이에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상임위에 보고토록 요구(10월 25일 추계안보고)

| (서울시) 지하철 내진 설계 불확실, 1,000만 시민의 안전이 위험하다!

- 내진 성능 실험보고서도 올해 처음 요구하였으며, 심사위원도 교통공사 내부에서 선정
- 시험 결과서도 설계서(유리+아라미드 섬유)와 달리 유리+탄소섬유로 조작
- 시험 결과서 위조 감사 요구 및 안정성 검증 등 보완조치 요구

안상수 의원실

문재인 측근들 낙하산 인사 및 부실한 정책 문제 지적

주요내용

| 박원순 시장, 서울시 위원회 방만·불법적 운영, 사전선거운동조직 활용 의혹 있어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위원회, 위원 수, 수당 두 배로 늘었지만 위원회 194개 중 35개 위원회는 회의 안 하는 불량위원회
- 박원순 시장, 측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원 4,667명 중 1,242(26.6%) 명이 출석 0회 유령위원
- 선거를 앞두고 무제한 위원 임명이 가능하게 한 뒤 '17년 11월 12월 수백 명 임명

|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산절감 핑계로 건설업 중소기업 강제 단가 절감시켜

- 이재명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무시하고 대기업 기준으로 한 자재 단가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죽이기에 도입.
-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표준시장 단가로 74억 원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건설사가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함.
-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공공사 삭감 정책으로 10년간 30%가 폐업을 했고 3분의 1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지자체 직무분석 없이 공무원 수만 늘려

- 정부의 요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더 받기 위해 직무분석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수를 늘리려 함.

| 도로교통공단, 한국자유총연맹, 공무원연금공단 낙하산인사

- 도로교통공단 방송본부장 면접점수 1차 서류와 다르게 높게 부여하여 임명
-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문재인 대학 동기 임명
-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진 문재인 측근들 대거 임명

유민봉 의원실

중앙과 지방에서 민낯 드러낸 문재인 정부의 '공평, 공정, 정의'

주요내용

|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 비리

- (안전업무직 채용)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 사태 이후 안전업무직 신설 및 무기직 채용, 이 과정에서 사내에 정규직 전환 소문 확산
- (채용 비리) 부실하게 설계된 채용설계(면접 중심)로 사내 정규직 친인척 손쉽게 무기직 입사, 이후 이들 정규직 전환, 이 과정에서 노조의 압력 작용 의혹
- (위증 논란) 채용 비리 검증과정,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수차례 말 바뀌 위증 논란

|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추진 사업 설계 부실

- (사회혁신추진단 내부구성원) 서울시, 희망제작소 경력자 다수 포함, 이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사업 심사 → 편향성 문제 대두
- (사업추진방식 문제) 긴급공고 남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준용(진입장벽 및 특혜 가능), 심사위원 서울시, 희망제작소 경력자 다수
- (향후 사업 추진) 향후 사업 추진 시 외주 용역이 아닌 자체 사업 추진 필요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

| (경찰청) 드루킹특검 파견자의 수사경력 미비 및 수사의지 부족

- 사회적 이슈가 큰 특검의 경우, 특검 파견 경찰관은 통상 수사경력 최소 7~8년 이상 베테랑 경찰관들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 (선관위 디도스특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파견 경찰관 총 9명 중 특검파견경찰관 9명, 수사경력 5년 미만은 1명으로 수사 베테랑 파견
- (이명박 대통령 사저 매입특검) 이명박 대통령 사저 매입 의혹 특검파견 경찰관 6명, 수사경력 5년 미만은 1명으로 수사 베테랑 파견
- (드루킹 특검)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조작 의혹 특검파견 경찰관 8명, 수사경력 5년 미만은 4명으로 수사 보조 인력을 대부분 파견

윤재옥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 실상 폭로

주요내용

| 청와대 지시로 공공기관 압박해 단기 일자리 줄속 추진

-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만들어 내라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정황 드러남.
-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담당자들을 기재부로 불러 단기 일자리 실적 제출을 면전에서 강요하는가 하면, 일자리 실적을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압박
- 결국 행안부 산하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청와대 압력에 못 이겨 국회 심의도 무시하고 계획에 없던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며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보조, 진행보조 등 고용 지표 부풀리기용 부실 일자리 사업을 줄속으로 추진

| 행정안전위원회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가 장악

-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7개 기관에 걸쳐 총 19명의 캠프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 이 가운데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양향자,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등 캠프 출신 다수
- 한국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임명된 한호연 이사장은 소방관련 경력이 전무한 기업 CEO 출신 낙하산 인사

| 소방안전특별조사 자격증 없는 청년인력 줄속 채용

- 각종 대형 화재 대응을 위해 올 6월부터 대통령 지시로 추진중인 소방청 소방안전특별조사에 자격증 없는 청년인력을 채용해 점검보조인력(전체의 40.2%)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인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점검 업무까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지적

이진복 의원실

불법에, 국민 안전에, 국민 건강에 눈 감는 정부의 무능을 지적

주요내용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이에 눈감는 정부

- 공공광고물의 남설 방지와 상업광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 시행령 개정(2011.7월까지 경과조치)으로 도로변, 철도 경계선 500m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광고판은 철거되어야 할 불법대상이 되었으나,
- 2016년 전수조사 이후 2018년 현재도 전국에 154개 광고판이 불법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대부분 지자체와 방송사 소유의 광고판인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지자체장 슬로건이나 정책 홍보, 일반 상업광고를 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점을 지적
-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 등 전국에 있는 지자체 모두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철거되었다고 보고한 광고판이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고, 이런 불법 광고판들을 정비 하려고 만든 옥외광고발전기금 또한 보고받을 때마다 숫자가 바뀌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함. 행안부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함.

유독가스에 무용지물인 제연설비를 방치하는 소방당국

-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 유독가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제연설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 국회의원회관 건물 외 2곳 제연설비 점검결과, 3곳 모두에서 제연풍량 자체가 공급되지 않거나 제연송풍구 가까운 곳은 과압이 형성되고 먼 곳은 압이 미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을 발견
- 소방당국의 전문성 미비와 안일한 업무처리를 지적하며 종합국감 시 책임의 범위와 대책을 논의 하기로 함.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 특히 미세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조체계를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다만, 우리는 아직 해안가 쓰레기나 바닷가에 가라앉은 폐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생태계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강조. 각 지자체마다 청향선 등을 마련해 해양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해볼 것을 제안함.

홍문표 의원실

홍문표 의원 국감백서 주요 내용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관련

- 문재인 정부 지방호대 심각, 말뿐인 지방 자치분권
- 국민생명 못 지키는 문재인 정권
- 문재인 정권 새마을운동 축소, 중단 나라근본 망가뜨려

| 경찰청 관련

- 자치경찰제 도입 일선경찰 의견 청취 없이 강행
- 경찰 몰카 단속 실적 전무
- 경찰간부 퇴직자 81% 전관예우, 대기업·유관 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 경찰의 국민신뢰 제고 강조

| 소방청

- 소방공무원 내년 국가직 전환 무산 위기 • 고층건물 화재피해 취약
- 서민의 “생계 터전 전통시장” 화재사고 매년 급증

| 중앙선거위 관련

- 중앙선거위 설립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비리문제
- 한국선거방송 실효성 • 선거여론조사 문제점

| 인사혁신처 관련

- 인사혁신처 설립이유인 5대 실천과제에 대한 점검

| 서울시 관련

- 박원순 대권놀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가 망가진다
- 문재인, 박원순, 민주노총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
- 문지마 청년수당, 청년청 신설 매년 500억지원

| 경기도 관련

- 이재명 지사, 도덕성(여배우, 가족, 조폭)문제
- 이재명 보은 인사 도지사인수위, 성남시, 낙하산 공기기관 인사

| 강원경찰청 관련

- 김병준 비대위원장 ‘수사 난항’ 7개월, 정치경찰 전형

| 경남도청 관련

- 김경수·드루킹 의혹

| 울산시청 관련

- 송철호 시장의 보은인사 • 송철호 시장 개인적 각종 의혹

| 울산경찰청 관련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공작 게이트, 정치경찰화 심각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접대골프의혹’

2018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가짜일자리 실상과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을 통한 가짜(단기)일자리 창출, 무분별·무원칙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장에 親 정권 인사를 인선한 보은인사의 실태를 구체적인 근거자료 통해 지적, 이슈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계의 편향적 실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의 편향적 언행, 예산운영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표리부동한 문재인 정부의 실태를 밝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통해 편향적 진상조사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북한과의 문화·체육·관광 교류’에 대한 자제 촉구
 -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성급한 교류 진행에 대한 속도 조절 촉구
 - 상호적 관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촉구
-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에 대한 합리적 비판
 -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 기자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 제외,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북한 관련 기사와 취재기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압박 실태 질타
 -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와 관련해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근거 제시
 -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행태에 대한 자제 촉구

✓ 평가

- 정부 실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문제 제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시정 촉구
- 다만, 피감기관인 문체부·문화재청과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원론적 답변 외에 시행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 함.

박인숙 의원실

북한의 아동 인권 유린에는 눈감고 공공기관장 자기사람 심기에는 혈안인 문재인 정권

주요내용

| 북한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관련 질의

- 박인숙 의원은 10월 10일 문체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 일행의 방북 간 ‘빛나는 조국’ 집단체조를 관람한 것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음.
- 박인숙 의원은 탈북 작가가 밝힌 집단체조의 비참한 실상을 언급하며, “어린이들이 강제적으로 훈련에 동원되고 맹장염으로 사망한 아이는 영웅 이라고 칭송되며, 소변을 못 봐서 방광염에 걸리거나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공연을 보고 ‘멋있다’, ‘훌륭했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였음.
- 문체부 장관은 이러한 질의에 “관람객 중 아이들이 행사를 준비하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도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을 북한에서 한 적이 있다.”고 해명하였음.

| 체육계 캠프코더 인사 관련 질의

- 박인숙 의원은 10월 23일 문체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의 선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음.
- 박인숙 의원은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에 9명의 후보가 지원하여 이중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조재기 후보는 면접과 서류에서 2등을 하였지만 1등을 제치고 이사장에 임명 되었다고 지적하였음.
-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캠프코더 인사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하였지만, 정치적 판단으로 심사결과를 뒤집어 버렸다, 막대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물이 정치적 편향으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하였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제점 지적

- 박인숙 의원은 10월 10일 문체위 국정감사를 통해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음.
- 박인숙 의원은 문체위 소관 1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을 공개하며, ‘불가·필요성 적음’은 16곳, ‘입장유보’는 2곳. ‘정부정책에 따를 것’은 1곳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부정적으로 답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 8곳에서 6년간 퇴직한 직원이 407명(전체직원대비 36%)에 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과 업무 비효율성을 보완하지 못한 채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추진은 선부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김재원 의원실

‘친문 캠퍼’ 낙하산 인사로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부 행태 지적

주요내용

‘캠퍼(캠프·이념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문화예술 공공기관

-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중 31%(249명 중 76명)가 캠퍼 출신
- 9개 문화·예술 기관은 전체 72명 중 50%인 36명이 친문 캠퍼 인사
- 정치편향적 인사를 통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부 행태 지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체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만 3,673명
- 정규직 전환 인력의 숫자가 기관의 원래 정원을 초과하는 기관만 10곳
-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과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과도한 부담 지적

대한체육회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심각

- 대한체육회장 측근들 비리 솜방망이 처벌, 국가대표 선수들 기강해이 초래
- 대한체육회 간부들, 대표팀 선수들 격려하러 간 러시아에서 ‘곰’사냥 의혹
- ‘음주 금지’된 국가대표 선수촌의 술판 실태 지적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술품 위작 판명, 관리 허술 지적

- 위작을 진작으로 알고 사들여 15년간 소장하면서도 알지 못해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92.3%가 작품확인서(진품보증서) 없어
- 소장품의 허술한 관리 실태 지적 및 전면적인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염동열 의원실

올림픽 사후활용과 폐광지역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다

주요내용

| 환경파괴 우려되는 가리왕산 복원

- 알파인 경기장은 건설 당시 올림픽 사후에도 활용할 계획에 따라 상시스키장으로 설계하여 무조건적으로 복원할 경우 환경파괴 우려 있음.
- 복원을 강행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 불가피하며 복원 가능성도 낮아
- 환경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활용방안 마련해야

| 올림픽 사후활용에 관심없는 올림픽 조직위

- 조직위는 올림픽 폐회식장을 활용한 평창올림픽 기념관 조성공사 진행 중임.
- 기념관 운영주체인 강원도와 협의 없이 설계 진행되어 올림픽 유산을 전시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
- 올림픽 정신 계승하고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하는 방안으로 올림픽 유산화 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동계올림픽 기념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해야

-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으로 국가 행정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기념·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
- 공단은 88서울올림픽 기념사업 및 올림픽시설 관리 위해 설립되어 30년의 경기장 관리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므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까지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광지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설립목적에 맞게 기금 활용되어야

- 10년간 강원랜드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한 금액 1조 2685억 원, 폐광지역을 위해 사용된 금액 580억으로 전체의 4.6%에 불과
- 지원된 사업조차 사업 진행 차질로 지역회생에 큰 기여하지 못해
-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 상향하고 지원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야

| 일본에 앞서가던 한국관광의 추락, 이제는 일본을 벤치마킹할 때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청 설립’, ‘비자유연화’,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설립’ 등 꾸준한 정책 펼친 끝에 관광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
- 액션플랜 없는 한국관광정책 일본으로부터 배워 새로운 전환점 펼쳐야

조경태 의원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주요내용

| 1만 명의 불법체류자 양산한 평창 무비자

- 전체 33만 명의 불법체류자 중 2018년 한해 8만 명 이상 증가
- 평창올림픽 무비자로 입국한 35만 명 외국인 중 11,635명 국내 불법체류 중
- 정부의 무분별한 무사증제도 남발이 불법체류자 증가 불러, 전면재검토 필요

| 성급한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추진

- 문화재청은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분 등 남북공동 발굴사업 재추진
-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지원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음.
-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문화재 발굴이 북한의 자금조달 수단 될 우려 있음.

| 남북단일팀 구성,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올림픽 정신

- 올림픽현장은 자율성을 갖고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국내 선수들 출전 기회 박탈당하여 스포츠 정신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

|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 반대한다!

- 민속박물관 용산 부지로 이전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며 세종시 이전이 거론되고 있음.
- 세종시 이전은 관광객들의 접근성 문제와 역사·문화 중심 수도인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결정임.
- 국립민속박물관은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인 서울에 있어야 함.

| 사회적 갈등 부르는 예술·체육인 병역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 ‘국위 선양’을 이유로 특정 입상경력이 있는 예술인, 체육인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은퇴 후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훈현 의원실

‘대책없는 포퓰리즘, 모럴해저드에 빠진 문재인 정부 질타’

주요내용

| 패럴림픽 국가대표 초청행사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비용은 체육회가 부담

- 청와대가 초청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선수단 격려 행사에 장애인체육회가 1억 1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
- 기획·디자인, 무대 장식, 영상 및 음향은 물론 행사 진행을 위한 인건비 등 식사비용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행사 비용을 장애인체육회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했으며,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자금 집행으로 인해 문체부에 예산 변경 신청함.
- 과거 청와대 초청행사의 경우 모두 국고나 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보전 받았음. 이에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에 비용을 떠넘기고 생색낸 청와대와 이 사태를 방조한 문체부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함.

| 퍼주기 논란,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문재인 정부 예술분야 “예술인의 문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고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 하지만 열악한 예술계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예술인만을 위한 별도의 금고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음. 또한 당초 계획인 국고 투자방식으로 재원마련을 못했고, 결국 처음 계획한 방법과 달리 문예진흥기금에 복권기금을 105억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바꿈.
- 결국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맡게 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은 없어짐. 애초에 전 세계 유례없는 사업이자 포퓰리즘식 퍼주기 사업으로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

| 문체부 예산을 지원받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업비리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지원받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KPSA)가 지원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활동을 하는 등 허술한 운영관리에 문제가 밝혀짐.
- KPSA는 1~2기 ‘에이전트 아카데미’ 모두 동일한 사업자를 선정함. 그러나 1기 선정 평가위원 중 일부가 이후 강사로 초빙되었고, 2기 평가위원 일부도 1기 강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음.
- KPSA는 이해관계자 논란을 의식해 평가결과 재산청을 시도하는 등 사업자 선정 규정마저 무시함. 이에 정부의 감독과 투명한 평가시스템 마련을 촉구함.

한선교 의원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국정감사

주요내용

| 블랙리스트

- 블랙리스트 조사 대상을 박근혜·이명박 정부로 한정한 문제점 지적 - 現 정부는 새로운 블랙리스트 작성 중
- 최초 블랙리스트 가동한 유진룡 前장관, 조현재 前차관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점 지적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인사 문제

- 전과 및 비리 전력에 있는 단체장들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면책 받거나 복권된 사례 지적
- 측근 인사를 체육회 무직제 보직에 임명하는 인사문제 지적
- 명예퇴직자(퇴직금 수령)를 개방형 보직에 임용한 문제 지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 중독률이 높은 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완화로 합법시장 키워야

| 정재숙 문화재청장 자격

- 문화재청은 발로 뛰는 곳... 글·말·생각으로만 일하는 곳 아냐
- 정치적 색깔 없어야 하는 자리

2018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농·어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과 공약이 文정부 경제·복지 정책에 밀려 허상이 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
 - 농·어업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정책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장관으로부터 예산 확보 약속을 받음.
- 쌀값의 작은 변화에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리는 왜곡 현상을 대처 하고 쌀목표가격을 농민들 요구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며 추진하며, 그 기준도 가정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10Kg으로 변경 요구하는 등 “쌀값 정상화”를 목표로 이번 “쌀목표 가격 설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음.
- 무차별 태양광시설 개발 추진으로 산림훼손, 부동산 투기, 지역공동체 분열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 文정부가 방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정부로부터 제도개선 및 환경영향평가·주민동의를 명확히 추진하도록 하였음.
- 남·북 산림협력 및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 되지 않은 “문지마·밀어붙이기 식” 지원과 실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점진적 추진을 요구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음.
-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18년 9,273가구로 2010년 3만314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3수준으로 급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금지원 확대, 노동력 확보 및 판로개척지원, 청년농업인 직불제 등 농촌에 적용하기 위한 시간적·장소적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제안을 하였음.

✓ 평가

- 2018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文정부의 농·어업정책 문제점 부각에 의원간 협력지원을 집중화, 체계화 하여 쟁점 이슈를 선도하였음.
 -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무리한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점, 남북 산림협력, PLS의 졸속추진으로 인한 농민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수산자원 회복, 농·수산물물의 안정관리 강화,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통한 농·어업 경제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음.
 - 특히,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통계만을 위한 가짜 일자리, 농·어업 관련예산의 사실상 축소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농·어민을 위한 보다 많은 예산확보 및 현장중심 정책변화를 주문하였음.
 - 또한 FTA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에 관련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음.

경대수 의원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확대 와 해양수호 의지 강조

주요내용

| 강행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과제

- 주요내용
 - '14.3.24. 환경부는 미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18.3.24.까지 3년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일('18.3.24)로부터 6개월 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평가 후 이행기간 1년 이상 추가로 부여
 - '18.9.27까지 이행계획서 45천 건 중 42천여 건(94%) 접수 추정
- 향후 조치 및 향후 과제
 -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에 대해 일률적 유예기간 부여
 - 가축사육제한거리 상하한선 설정, 입지제한구역 내 위치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방안, 개방형 우사의 가설건축물 인정기준 완화, 축사면적 상향조정 등 축산농가 건의사항의 제도적 해결
 - 적법화 이행을 위한 충분한 기간과 행정적·재정적 정부 지원 확대 강조

| 해양영토 수호의지 부족

- 일본은 '10년 자국 교과서에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하고 총 447만㎢를 관할 해역으로 선포
- 중국은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국의 해양영토 면적이 총 470만㎢라고 표기하고 있고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인근 등지에 중국 부표 발견
- 정부는 우리의 해양영토 면적 추정치는 44만㎢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국가기관 어느 홈페이지에도 해양영토 면적을 표기한 사례가 없음.
- 향후 조치 및 향후 과제
 - 우리나라도 해양영토 면적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장함으로써 향후 해양경계 협상에 대비하고 해양영토를 반드시 수호해야 함을 강조

강석진 의원실

재앙을 막고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 정권 심판 국감 수행

주요내용

| 고용통계 조작을 위한 가짜 일자리 양산 비판으로 소득주도성장 타파

- 농어촌공사 415명 중 18명이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음을 밝혀낸데 이어 전수조사를 요구하여 10명 추가 발견 성과. 이후 전 기관의 전수조사 실시 성과, 마사회 정규직 전환자 5,519명 중 98명, 농협 383명 가운데 7명이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 확인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998년 이후 448%)으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대변하고 쌀 목표가격에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필요
- 고용통계 조작을 위한 공공기관의 가짜 일자리 양산 정책 강력 비판,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부터 “오죽 답답해서 그러겠냐. 불필요한 일자리는 거부하겠다”는 답변 성과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528개의 가짜 일자리 폭로

| 脫원전 철회

-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성 불투명(수익성 저하)과 산림훼손 등 태양광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부각, 허가요건 강화 및 주민반대 등 문제 발생 시 사업 중단 약속 성과

| 북핵 폐기 촉구

-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서해 NLL상 공동어로구역 내 무장 선박 진입 불가에 따른 해경의 중국 불법 조업어선 단속 무력화 비판 및 UN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가능성 부각. 북핵폐기 이전 선부른 평화무드 조성 강력 비판

| 정치보복 봉쇄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임직원 보복 징계,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방침 유도

| 농어민 대변

- 농해수위 차원의 ‘PLS제도 시행유예 촉구 결의문’ 추진
- 내수면어업 활성화 약속, 농수산물 재해보험 국비 지원 상향 조정 방침 유도 및 동상해, 폭염 피해의 주계약 전환,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동의하에 개인정보 제공), 우리밀 보호육성 정책 마련 촉구

김성찬 의원실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추진 사업 전 국토가 몸살 및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남북어업협력

주요내용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추진 사업 전 국토가 몸살

- 농림부, 구체적인 사업검토도 없이 '22년까지 3.3GW(0.5ha), '30년까지 10GW(1.5만 ha) 신재생 에너지 공급 추진
- 김재현 산림청장, '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지전용 총 7,714건 중 4,216건 54.6% 차지, 전용면적은 총 3,928ha 중 1,924ha(49%),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6.6배
-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동체 활성화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 5곳 중 3곳은 전력계통 연계 불가. 내년 하반기('19.9)에나 가능, 사업지 선정 시 한전과 구체적 협의도 없이 결정
-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으로 산지 태양광 설치 시 벌채, 식생·지형·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및 토사 유출 피해 발생
- 외부인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사전고지 없이 주민이 사후적으로 사업을 인지하게 되어 지역사회 기여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주민갈등 유발
- 태양광 사업 참여 과정에서 하위·과장 광고, 시공하자, 분양·부지 매매 사기 등 발생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및 환경영향평가 엄격히 추진해 지역갈등 방지 및 환경오염 최소화 필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남북어업협력

- 정상회담 전에는 협의 없었다는 해수부, 3차 남북정상회담 군사합의서에는 해양수산(평화수역, 공동어로) 관련 내용 포함.
- 북한의 NLL 인정 없이, 북한의 침투로인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계획 발표
- 남북 해양수산협력은 해주항 수로조사, 북한해역 자원량 조사, 중국어선 입어 금지조치, 전후 남북 어선원 송환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
- 해수부 용역 결과, 북한 5대 항만 개발 및 현대화 시 약 5조 원 예산추계 항만배후단지 및 도로까지 개발 시 수십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 투입 필요
- 그러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에는 관련 내용 누락
⇒ 대북 퍼주기 해양수산협력이 아닌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북한해역 해양환경, 자원조사 방안 마련과 비용추계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김정재 의원실

특혜채용 / 가짜일자리 및 구멍 뚫린 농산물 안전점검

주요내용

| [특혜채용 / 가짜일자리 / 일자리수 부풀리기]

-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에서 일반 비정규직자보다 재직자 친인척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3배나 높음. 또한 경력자 공채에 재직기간 규정도 없어 5시간 근무자도 '경력자'로 인정되는 등 정규직 전환 채용시스템에 중대 결함이 발견됨.
- 마사회는 투자한 예산에 일정한 고용창출 계수를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정한 수치를 실제 창출되는 일자리로 보고하여, 5년간 336명의 가짜일 자리를 만들어냄.
- 농어촌공사는 ① 외주용역 사업을 단기일자리로 속이고, ② 이미 수행 중인 3개월 단기알바로 "서민경제 부흥",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홍보

| [구멍 뚫린 농산물 안전점검]

- 유통판매단계에서 총각무에서 살충제 성분이 적발되었으나, 생산자를 몰라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불가능함.
- 식중독균의 잔류허용 기준치가 없어 농식품부는 농산물에서 아무리 많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취나물과 같은 계속 수확 작물의 경우 중금속 안전성 조사에서 중금속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더라도 조사 시점 이전에 수확하여 출하한 농작물은 폐기하지 않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 [식중독 학교급식, 80%가 aT서 유통]

-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은 이용수수료 명목으로 지난해 6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림에도 학교급식 안전문제는 외면
- 지난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가운데 eaT로 식자재를 납품받은 학교 비율이 80%, 이마저 매년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김태흠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확대, 태양광 광풍, 가짜일자리 등 실정 심각

주요내용

Ⅰ 뒷순위, 확대, 농어업예산

- 정부 총예산은 올해 7.1%, 내년 9.1% 증가한 데 반해 농어업 예산은 1% 증가에 그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확대 심각
- 정부 총예산 대비 비중을 보면 2017년 농업예산은 3.6%, 어업예산은 1.2%였으나 2019년에는 농업 3.1%, 어업 1.1%로 축소
-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 총지출은 2018년 428.8조 원에서 2022년 567.6조 원으로 연평균 7.3%씩 증가하지만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은 2018년 19.7조 원에서 2022년 19.6조 원으로 연평균 0.1%씩 감소 예정

Ⅱ 탈원전으로 인한 태양광 광풍으로 환경파괴, 친여성향 협동조합 특혜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파괴, 친여(興)성향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집중 등의 문제 발생
- 산림태양광은 지난해 이후 2년간 4,200여ha를 허가해 과거 10년간 총면적 (1500ha)의 2배가 넘는 산림이 파괴됐고, 태양광 설치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최대 100배의 지가상승이 발생해 태양광발전이 투기수단으로 변질
- 수상태양광은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3400여 개 저수지를 활용해 2020년까지 25.2GW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청와대가 「저수지 수상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 TF」라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300kw급 소규모 수상태양광을 협동조합이 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있음.

Ⅲ 초단기 알바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가짜일자리대책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초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통계를 조작하고, 악화된 고용상황을 은폐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는 객장을 관리하는 경마 지원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일자리 5,500개를 만들었다고 홍보했고, 고용노동부도 '정규직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웠으나 실제로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일하는 초단기 알바를 정규직화한 것으로 드러남.

이만희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가짜·무능 농정실책에 대한 이정표 제시

주요내용

|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도농차별’

- 국민연금 보험료 농민 지원,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 도시 노동자 대비 지원이 적고 수혜 요건이 까다로워 정작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은 지원에서 배제
- 농가 간 소득 양극화를 부추긴 면적비례 직불제 문제 지적. 영세농·고령농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안정망 마련 필요, 농작물 및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요망

<향후 조치 및 대책>

- 직불제 총액 예산을 늘리고 영세농·고령농에 대한 소득보장 공익제 직불제 확대 요청, 농작물 재배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지역별 요율차이 해소 및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추진

| 일자리 늘리겠다며 세금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 일자리 분식회계까지

- 신규 증원이 아닌 기존 고용인원을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시켜 부풀리기
- 실제 일자리가 아닌 통계상 간접 고용효과를 추정하여 과대포장
-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동원된 ‘가짜’ ‘단기’ ‘급조’ 일자리

<향후 조치 및 대책>

- 전년 대비 신규 증원된 직접고용 일자리만을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농림부 및 소관부서 일자리 통계 산출방식 개선 이끌어내
- 고용유발계수와 사업예산으로 고용효과를 단순 추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실에 실존하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재조정

| 우리 농촌을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태양광 속도전

- 산림 황폐, 토사 유출, 부동산 투기 등 산지 태양광 부작용에도 수수방관 산림청
- ‘다다익선 속전속결’ 저수지 태양광 추진, 본말이 전도된 한국농어촌공사

<향후 조치 및 대책>

- 향후 농촌 태양광 사업 추진에 있어 농촌의 경관 보전, 식량 안보, 환경과 동물복지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신중하게 추진 예정
- 한국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주민 반발 시 추진하지 않는다는 답변 이끌어내

| 낙하산과 계획만 남긴 해양수산 분야 정부 행태

- 어촌뉴딜 300, 해운재건 계획 등 구체적 실행 없이 장밋빛 계획만 발표
-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통령 측근 등 비전문가 배치

<향후 조치 및 대책>

- 수산물소비량 통계 개편, 바다숲 조성 수의계약 개선 등 제도 변경
- 금융당국 주도 해운산업 지원에 해수부 참여 확대 추진 및 성과 점검
- 농해수위 내 해운산업재건 소위 구성 제안

이양수 의원실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물가상승률과 농가의 입장을 고려한 적정수준 쌀값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은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임.
- 농가의 입장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4만 5천 원은 되어야 적정수준임.

| 농업인 및 임업인의 입장을 외면한 PLS제도의 성급한 시행

- PLS제도가 이대로 성급하게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림인 몫

| 농어촌공사 수면태양광 사업 선불리 추진하지 말고 속도 조절해야

- 수면태양광 시설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피해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전까진 신중히 고려할 것

| 어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법공조조업 근절대책

- 불법공조조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TAC 배정량 적발 어선의 배분량을 대폭 삭감할 것과 대형트롤어선의 VMS 2개 장착 의무화, 기획 수사를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 등을 요구함.

| 어로소득과 양식소득간의 어가 소득 격차

- 어로소득과 양식소득 간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해수부의 정책은 양식 산업에 치중된 반쪽짜리 정책임.

| 해경72정 인양과 예우에 소극적인 해양경찰청

- 72정 승조원에 대한 예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치고 적극적으로 수색에라도 나서야 할 것임.

<국회운영위원회>

| 정부의 쌀 목표가격 제출 충격, 대통령, 부총리, 장관 모두 거짓말

- 정부가 5년 전 가격보다 고작 192원 올린 쌀 목표가격을 제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대통령도, 19만 원 이상 올리겠다는 부총리도 장관도 모두 거짓말, 반드시 철회하고 적정 목표 가격을 제출해야

| 업무추진비 공개는 기밀유출 고발, 통문번호 노출 군사기밀 유출은?

- 비서실장이 언론에 공개한 영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GP통문번호가 노출된 가운데 명백한 국사 기밀인 GP수색요원들의 이동 경로까지 노출됨.
- 이는 명백히 군사 기밀 사항이 유출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함.

2018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재앙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함께, 정부 내에서도 관련 계획에 대한 변화 필요성 대두,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
- 졸속적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제 침체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혀나가기 시작했고, 대안 마련 즉,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과 52시간 근로제 유예 등의 관련 정책 대안 등 정부 전달
- 자유한국당은 치열한 국감을 마무리하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산업전환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나팔수 역할 대신 對국민을 위한 소신 행정의 필요성 강조해 강한 공명을 일으킴
- 미·중 무역 갈등 등 대한민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주무 담당자인 산업부장관 등 관계자와 여당에 각성을 촉구하는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통상 정책 재고 등 경종

☑ 평가

-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적 오류와 호도를 지적하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한 국감
- 친여권 성향의 언론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은 향후 재평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부터 벤처기업인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계에 대한 경제 조망과 함께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경제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해 정부와 여당에 긍정적 충격을 주었음.
-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 캠퍼더 인사, 고용세습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부 견제에도 충실했던 국감

홍일표 의원실

정부의 경제·에너지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

주요내용

| 탈원전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

- 탈원전 고집만 전기료 올라간다. 산업용 전기료 올리면 4차 산업혁명에도 타격 불가피
-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미비 지적.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이 상위 에너지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며, 국민적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문제 지적
- 원전폐쇄 따른 기술·인력 사장과 생태계 붕괴, 수출 타격 문제 지적
- 탈원전 정책은 기후변화대응, 탄소감축 이행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
⇒ 건설 중단된 신규 원전 가운데 신한울 3·4호기부터 조속 재개할 것 요구

| 최저임금 인상 비판 및 대안 제시

-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무시는 가장 큰 패착
-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 대변하지 않고 정부 정책 이행에만 몰두하는 행태 비판
⇒ 중소기업부가 나서서 업종별 차등 적용하도록 정책 전환 유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규제혁신 노력 부족 지적

-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개발 및 규제혁신 노력 부족 지적
-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 전기요금 인상 우려, 구조조정 실패 등에 따른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 지적
⇒ 규제혁신과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

이종배 의원실

산업·중소기업 분야 문재인 정권의 무능 및 적폐 심판

주요내용

| 산자부 산하기관 캠퍼코더 인사 무려 54%에 달해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한 인사 총 174명 중 무려 94명이 캠퍼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인 것으로 드러남. 심지어 캠퍼코더 인사 대부분이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음.
- 과거 정부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집권한 문 정부가 오히려 '신적폐'임을 지적

|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야 할 중기부, 오히려 소상공인 탄압에 나서

-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에 대해 보복성 조사를 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내년도 협회 지원예산을 일괄 삭감
-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및 시정 조치', '최저임금 인상 집회 시기', '연합회 예산 삭감 사유'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위증임을 밝혀냈음.
-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대한 탄압과 위증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

| 관련 경력도 없고 만 42세에 불과한 전직대통령 손녀사위 공기업 임원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녀사위인 장상현 씨가 코트라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에 선임됨.
-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은 '정부기관, 국제경제기구, 다국적기업 등에서 책임자급 경력자'로 명시했는데, 장상현 씨는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음.
- 만 42세에, 관련 경험도 전혀 없는 인사 임명이 '윗선'의 지시 없이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

|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은 나 몰라라 하는 공영홈쇼핑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100% 국내 생산 제품만 취급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에 생산 공장이 외국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판매제품 약 30%가 퇴출 위기에 처함.
- 이는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고,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으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곽대훈 의원실

신적폐 양산하는 문재인 정부

주요내용

| 신재생 확대, 부작용 심해 농림부·산림청도 반대로 돌아서

- 태양광 29,473곳(5.27GW), 풍력 63곳(798MW)으로 3만여 곳에서 산림훼손, 환경파괴, 주민 갈등이 일어났고, 전국 3만여 곳에 납을 뿌려 농음.
-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여의도 면적의 9배의 산지전용이 증가했고,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 초래
- 애국가 가사 중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나오듯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금수강산, 화려강산이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으로 뒤덮이는 현 실태 지적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다시 세워야!

-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환경파괴, 주민갈등,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위법한 계획임.
- '18년 6월 기본계획을 몰래 수정하는 등 법적 근거 없는 계획을 의결함.
- 산업부는 정부 최상의 에너지 시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제4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은 무시한 채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다시 만들어야함.

| 중기부 언론통제, 홍보갑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여론 무마용 광고비를 부처 예산으로 급히 집행함. 특히 중기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산하기관에 정부광고비를 대납시킴.
- 홍보혁신 TF가 홍보전략회의 등을 주재하며 중기부 및 산하기관의 모든 홍보를 통제하며 홍보 갑질을 함.

김규환 의원실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사회 곳곳에 부작용 발생! 文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주요내용

| 수입규제 194건, 文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74.4% 급증

-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25개국에서 194건으로 나타남. 또한 文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23억 4,3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4.4% 급증함.
-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기업환경은 악화되고,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 주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무관심으로 기업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
- 정부는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수입규제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책 마련 필요 지적함.

| 정부 탈원전 정책 부작용 지적한 한수원 연구보고서 은폐·묵인·위증

-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대국민 공개했지만 사장이 해당 보고서를 은폐·묵인하려는 의혹을 지적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LNG 투자 비용 178.82조 원이 소요되고, 전력의 평균정산단가는 무려 200.84원/kWh(現 약 98/kWh)에 육박해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한수원이 보고서 출처 및 대외공개 관련하여 국감장에서 위증한 것을 지적했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직접 이해관계자인 한수원이 나서서 정부와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도록 주문함.

| 중소기업 R&D 투자금 2조 이상 증가했지만 기술능력은 하락!

- 민간영역을 포함한 중소기업 R&D 투자금액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 능력은 하락함.
- 중소기업 기술 수준 목표치가 90%였으나, 74.7%로 계획 수립 당시 77.4%보다도 하락하였고,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도 수년째 절반 수준 상황임.
- 중소기업 R&D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단계 간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당부함.

김기선 의원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숨기나

주요내용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반입, 관계기관의 엇갈린 주장

- 8월 10일, 관세청은 남동발전 수입 석탄이 북한산으로 밝혀졌다고 조사 발표
-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은 진릉호가 동해항을 통해 들어 온 것으로 입항 후 '북한산 석탄 조사'를 위해 통관보류('17.11.10)가 됨.
- 통관보류가 되자 남동발전과 남동발전의 수입신고 대리인 관세법인 한주는 동해세관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였고, 동해세관 수입통관 담당자는 통관보류 사유(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건)를 관세법인 한주에 통보해줬다고 함.
- 의원실 확인 결과, 당시 관세법인 한주는 통관보류 사유를 남동발전에 통보 해줬다고 했지만 차후 말을 바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 번복
- 남동발전 역시 통관보류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 관련 의혹을 지적 및 위증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

북한산 석탄 반입 자금,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 관세청이 8월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석탄 자금 흐름에 대해 '북한에 대금 지급 사실이 없다'고 발표
- 하지만 관세청의 조사 발표와 달리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북한으로 석탄 반입 자금 일부가 흘러 들어갔다'며 관세청 진술을 번복(관세청 담당자 답변 확보)
- 의원실은 검찰의 확인 요청으로 관세청 대구세관은 지난 10월 12일, 피의자를 다시 불러 '자금 흐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파악
- 관세청 확인 결과, 이전 수사에서는 외환 관련 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
- 이에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의 부실 수사에 대해 지적하였고, "북한산 석탄 대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국정감사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북한석탄TF에서 관련 조사 지속 예정

박맹우 의원실

고용세습 만연·단기일자리 급조·졸속 탈원전

주요내용

| 한전KPS 등 산중위 소관기관의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

- 산자중기위 소관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17.5~2018.8월까지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KPS에서 정규직 전환자 240명 중 11명이 자녀로 드러난 것을 비롯해 강원랜드 4명, 한수원 2명 등 모두 20명의 친인척 채용이 있었음.
-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채용 비리에 대해 적폐로 몰아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고 청년들의 환심을 샀으나, 금번 공공기관 친인척 고용세습은 죄질이 더 악랄하고 대규모임.
-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아 취업준비를 해온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코트라 등 산중위 소관기관의 단기일자리, 체험형 인턴 급조

- 산자중기위 소관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단기일자리와 체험형 인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단기일자리 23개 기관이 4,635개를, 체험형 인턴은 16개 기관에서 1,525명 추가고용 계획이 드러남.
- 소관기관, 특히 코트라는 당초부터 고용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기재부로부터 8차례 독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최초 0명에서 그 다음엔 10명, 최종적으로 112명을 제출했다고 실토함.
- 이어 기재부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으나 세금을 투입해 급조해낸 가짜일자리에 불과한 바, 시장에 투입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 졸속과 특혜로 얼룩진 저수지 태양광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체복지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 기재부·농어촌공사·산자부·한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5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함.
- 5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저수지 중 3군데가 전력계통이 불가하다는 한전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2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시중은행에게 저수지태양광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하도록 외압을 넣은 의혹도 제기됨.
- 급속한 태양광발전 확대정책과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심각한 부작용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인 태양광 발전 밀어붙이기와 성과에 매몰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윤한홍 의원실

국민의 권익과 안전은 뒷전,
자기 식구와 정권의 안위만 챙기는 문재인 정부

주요내용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국민 고통 가중시키며 자기 사람 배불리는 제2의 바다이야기

-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 위기(학계, 산업계)와 정부의 무대책을 입증
-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비용 급증을 증명
- 각 에너지 계획간 불일치를 밝혀, 급조된 탈원전 정책의 허상을 드러냄.
- 신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발전사업)이 친여권 인사들의 돈벌이 사업에 불과함을 밝힘.

북한산 석탄 반입 = 제2의 대북송금?

-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관세청과 남동발전간의 거짓말을 밝힘.
- 관세청의 축소, 부실 수사 여부를 집중 추궁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최저임금 전도사가 된 중기부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면 누구든 정권의 적이라는 중기부의 속내를 밝혀냄.
-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OEM 중소기업 공영홈쇼핑 퇴출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내버리고 정권의 대변자로 전락한 중기부의 현실을 드러냄.

이철규 의원실

‘탈원전 1년’, 경제-안전-환경 모두를 잃었다 !!**주요내용****| (경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1년간 ‘한전’이 구매한 전력량은 총 522,204GWh였고, 취임 후 1년간은 539,336GWh로 17,132GWh 증가했음. 증가율은 약 3.3%임. 같은 기간 원전 가동률은 74.15%에서 64.09%로 10.06%p 낮아짐.
- ‘한전’은 원전감소분과 전력사용 증가분 38,738GWh를 ‘LNG와 석탄’으로 충당함. (LNG 22,330GWh 증가, 석탄 14,030GWh 증가)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1년간의 원전 비중 28.1%를 유지했다면, 원전의 발전량은 151,426GWh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125,013GWh만 공급함. 원전을 LNG로 대체하면서 1년간 1조 3,665억 원의 전력구매비가 추가 발생함.

| (안전) 탈원전으로 송전선로 과부하 2년 새 4배 증가

- 송전선로의 부하율이 90%를 넘어선, ‘위험’ 상황이 16년 75회, 17년 98회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8월 말 현재까지 181회로 급증함.
- 시기를 1월부터 8월 말까지로 한정하면 16년엔 47회, 17년에 57회였는데, 올해는 181회로 2년 사이 4배가 증가했음.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발전량이 낮아지자, 수도권 전력공급 지역인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의 발전량을 늘렸고,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남은 전력이 비수도권으로 남하하면서, 송전선로의 부하율이 높아지는 악순환 발생

| (환경)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급격히 증가

- 문재인 대통령 집권 전 1년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2910만 톤이었고, 집권 후 1년간 배출량은 2억 4,730만 톤임(1,820만 톤 증가)
- 한전 구매발전량 기준으로 ‘발전량’이 3.3% 증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7.9%가 증가함.
- 집권 전 원전 비중을 유지했다면 연간 1,068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음.

장석춘 의원실

국정감사 성과

주요내용

|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탈원전 실행 위해 경제성평가 조작한 한수원

- 월성1호기는 2018년 6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동이 중단됨.
- 2018년 상반기 기준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 당 61,820원이었는데 경제성평가 자료에는 판매 단가를 55,960원으로 책정함. 두 개의 전기판매수의 결과값은 112억 원이 차이이며, 경제성 평가에 나온 2022년까지 비교하면 1,543억 원이 차이 남.
- 경제성평가 자료상 월성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563억 원 손해 예상이었지만, 현재의 판매 단가를 적용하면 1,543억 원의 전기 판매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월성 1호기는 약 1천억 원의 경제성이 있음.
-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조작임을 비판하며, 경제성평가 재 실시 및 월성1호기 정상적인 운용과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요청함

| 3MWh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저조한 실행률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6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7,665건이었던 것이, 2017년 30,87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함.
-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67,750건이었던 것에 비해 환경영향평가는 3,626건으로 단 5%만 평가를 받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어있기 때문임. 이에 태양광사업계획서 구비서류에 사업대상 부지를 중심으로 표시된 2만5천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축척 위치도와 해당지역의 식생이나 개발현황을 파악 가능하도록 사진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함.

| 민간기업 손실 유발하는 국산 LNG선박 화물창 기술 문제

- 한국가스공사는 LNG선박 화물창 기술인 KC-1을 가지고 LNG선 2척을 설계함.
- 기술을 적용한 LNG선 2척이 건조 중이며 운항은 SK해운과 건조는 삼성중공업이 맡고 있음. 선박 과정에서 제작 불량 등의 이유로 수송선 인도가 5개월가량 지연되었고, 삼성중공업은 선박건조 지연으로 발생한 180억 원 발생
- SK해운은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코너부 단열재 사이에 결빙 현상이 나타나 현재는 정박 중이며 올해만 3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
- 민간기업의 막대한 손실 초래는 물론, 국산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전수조사 및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정우택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생은 피멍들어

주요내용

| 붕괴되는 제조업, 길 잃은 「기업활력법」

-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기침체는 가속화되어 제조업의 투자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 붕괴위기에 처함.
- 지난 2016년 우리산업과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사업 재편 승인기업이 급감하는 등 제조업의 붕괴에도 선제적 사업재편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대기업특혜 우려로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고, 前정부에서 제정되어 정부·여당의 불편한 시선도 기업활력법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활한 제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법치주의조차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한전 및 발전공기업을 우량기업에서 적자기업으로 몰아넣고, 원전 안전조차 위협하는 원전부품 생태계를 붕괴시킴.
-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1조」에서 정한 전기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자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임.
- 또한, 위법적인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민들의 전기요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초헌법적 발상임.

|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국가산단 휴폐업 급증

-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으로 국가산단 유희부지가 2016년 2,375,000㎡에서 2018년 4,694,000㎡로 2배 급증
- 기업유치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가 절실

정유섭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산업·소상공인 국정파탄 행위 중단 촉구

주요내용

탈원전 중단 촉구

- (산업부) '에너지 고립 섬' 한국에서 탈원전은 망국적 행위
 - 원전 인프라 붕괴 : 기술인력 유출, 원전산업 붕괴, 수출 주도권 상실
 - 전기요금 상승 압박 요인 : 국민복지 저하, 산업경쟁력 약화
 - 온실가스 증가 : 석탄발전 증가로 역주행
 - 에너지 안보 위협 : 에너지원 대외의존 심화
 -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재식 탈원전 추진, 국고손실행위 자행
 - 계획된 신규원전 추진 필요 :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일자리 세습 폭로

-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친인척 41명, 1203명 정규직 전환
가스공사 말 바꾸기 사내 친·인척(25명, 10/19) → (33명, 10/22) → (41명, 10/23)
- (한수원) 정규직 전환직원 축소보고 (21명 10/19)→(32명 10/22)
-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홍역 치렀던 강원랜드, 특채과정서 친인척 25명 뽑아
- (남동발전)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 가족 7명 정규직 전환, 500명 정규직전환

민생·기업경제 파탄

- (산업부) 일자리 위한 산업정책 수정 필요, 현재 정책으로 기업투자 못살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산업혁신운동 기부금 강요 금지
- (중기부) 최저임금 급격한상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제 파탄 책임
 - 영세 자영업자 매출 1년 새 4%↓, 소상공인 11개 업종 5.7%↓
 - 편의점 폐업점포, 올 8월까지 1,900개 vs 작년 한해 1,367개 39%↑
 - 편의점 업주 임금체불 '15년 17억 원 → '18.8월 29억 원 급증
- (소진공·중진공) 최저임금 피해, 현장목소리 듣지도 않고 허위보고까지
 - (중진공) 간담회·대책 수립無, (소진공) 중기부 지시에 형식상 개최에 허위보고
- (중기부) 중소기업 100곳 중 14곳은 한계기업, 7년 새 33% 급증
- (기술보증기금) 창업·벤처 기업 보증사고, 4년 새 각각 34%↑ 벤처 37%↑
- (코트라) 신규수출기업화 지원 10개 중 6.6개는 수출 줄거나 제자리
- (한국전력)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최대 3.5배 차이

대북문제 편향에 對美통상실리 잃어

- (산업부) 자동차수출 등 車산업위기에도 韓美FTA개정시 화물차관세 양보
- (한국GM) 국민혈세 투입(8500억) 합의해줬더니 GM 하청회사 전략 위기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총평**✓ 핵심성과**

- 국민연금에 대한 文정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 지적과 책임있는 자세 촉구
 -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천조 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히며,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은 계획을 요구
 - 부실한 4차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제기, 최악의 국내주식투자 수익률 지적,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연, 복수안 국회 제시 등 다양한 실정 지적
-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확대 이면에 가려진 건보료 폭탄 등의 문제 지적
 - 건강보험 보장률이 15년 대비 16년에 하락되었다는 점에서 소요재정의 재추계 필요성에 대해 최초 지적
 - 건보료 폭탄, 재정절감대책 부실,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비 부족 등에 대한 문제 지적
 - 특히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막대한 홍보비를 사용하고도 비급여의 급여화 부분에만 홍보의 중점을 두고 있는 실태 등을 비판
- 국감과정에서는 文정권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의 무능 지적
 - 박경서 대한 적십자사 회장의 그릇된 성인식과 권위의식의 행태 지적
 - 민간병원보다 못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실태와 정기현 원장의 무능하고 나태한 태도 질책

✓ 평가

- 국민연금, 문재인 케어, 먹거리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관련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文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대해 송곳검증을 실시하였음
 -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사전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이슈에 대한 토론, 의원간 질의 사항 공유, 쟁점 현안에 대한 역할 분담 등 팀플레이를 통한 협공으로 이슈 주도 및 정책국감 실현하였음.
- 국민연금, 문재인 케어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외에도 다양한 정책감사 실시
 - 文정권의 가짜일자리 및 고용세습과 관련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동수당 행정비용 과대추계,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에 대한 운용 개선촉구, 해협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제고, 결핵에 대한 선제적 조치 마련 촉구 등 다양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명수 의원실

급증하는 노인진료비, 구체적·체계적·예방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2017년 28조 3,247억 원으로 2010년 14조 1,350억 원 대비 2배 증가,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25만 5,000원(2017년)
-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며 ‘문재인 케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
- 통계청 인구전망(2016년)에 따르면, 2060년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4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민건강보험공단(2017년)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는 2030년 91조 원으로 2015년 22조 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며, 1인당 노인 의료비는 2015년 362만 원에서 2030년 76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노인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외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입원의 경우 치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다수임.
- 정부는 올해부터 ‘동네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 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했지만, 건당 총진료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이는 오히려 의료 이용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현재와 같은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고수할 경우 노인의료비 관리는 불가능해져, 2025년 이후 노인계층이 ‘의료 난민’이나 ‘돌봄 난민’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해결 방안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필요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필요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금연, 금주, 운동) 형성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일상의 노력부터 동네의원을 통한 단골 주치의 제도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심과 투자 필요
-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필요

김명연 의원실

문재인 정부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 (건보재정 고갈, 난임시술 건보적용,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더 내도 2027년에는 건보개정 고갈

- 매년 건보료를 3.49%씩 올려도 2027년에는 건보 재정이 결국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국회 예산정책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8%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2027년에는 법정 상한을 풀고 인상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건보 누적적립금, 국고지원금 모두 국민의 보험료고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향후 재정대책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지적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 정부는 체외수정 1회당 평균 진료비용 약 359만 원에서 약 102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라 발표. 시술 지원을 최대 10회까지 건보 적용을 해준다고 홍보
- 난임 여성들에 따르면 1회당 시술비는 250만 원 수준이며 보조 시술이 필요한데 그것은 건보 적용이 제외가 되어 있고 각각의 난임 여성이 필요한 시술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서 건보 적용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옴.
- 심지어, 건보 적용 대상이 만 44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 나이 때문에 시술받기 어려운 실정을 지적 하며 제도상의 허점을 강력하게 비판

전화 안 받으면 피할 수 있는 현지실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구멍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식약처는 2017년 우려가 있는 곳 247개소를 선정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실사를 진행하지 않음.
- 현지실사 통한 부적합 판정 시 수입중단, 통관단계에서의 부적합 판정 시 폐기 또는 반송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미응답 업체가 생기는 것
- 업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실사를 나가지 않는 식의 행정 편의적 방식을 지적하며, 미응답 업체가 생기지 않게 하고 통관단계를 강화하도록 질타함.

김세연 의원실

연금 재정의 심각성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향후 누적 재정적자 규모 심각한 수준

- 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재정계산 결과 2042년 수지 적자 시작
- 2057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면 연평균 532조 원 적자 발생
- 2088년에는 1경 7천조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함.
- 재정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임.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는 총 3,526,071명으로, 지역가입자 전체 7,399,827명 대비 47.7% 수준으로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함.
- 27세~34세 납부예외자는 전체 지역가입자 1,128,860명 중 843,374명(74.7%)
- 27세~34세 체납자 218,161명 중 98,566명(45.2%)은 1년 이상 장기체납 중으로 청년층의 고용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파칩 서버 사용

- 애플과 아마존의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슈퍼마이크로사 칩이 발견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5대의 슈퍼마이크로사 완제품 서버와 10대의 통신장비의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3대의 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득과 건강정보 등을 가지고 있는 두 기관의 서버에 대해 긴급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함.

김순례 의원실

도 넘은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 정책 헛발질

주요내용

|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연금공단 코드인사 사퇴 촉구

-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 성희롱 발언과 의전차량 교체, 비서실 신설 등 ‘황제의전’ 논란, 감사실장 임용비리, ‘꼼수’ 지방이전 문제를 지적해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 고발을 요구함.
-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취임 후 간호사 마약류의약품 차량보관 사건, 남자간호사 마약으로 사망사건에 대한 은폐의혹, 독감백신 불법구매, 불법투약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의 힘을 이용해 복지부 과장을 좌천시킨 사건 관련 질의를 통해 사퇴를 촉구함.
-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앞세워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에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등 연금공단 이사장직을 활용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점 지적

| 결핵, 음, 에이즈 등 감염병 대응방안 부실 지적

-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임에도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무하고, 한 사업장에서만 지난 5년간 190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한 곳에도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결핵관리 종합계획’ 전면 재수정을 이끌어냄.
-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시설 환자뿐만 아니라 ‘근무자’에 대한 음과 결핵 등 감염병 발병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28만 명의 종사자가 일하는 재가시설에 대한 감염병 현황 파악을 촉구함.
-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가 ‘동성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질병관리본부를 질타하고,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콘텐츠 차단, 동성애 아르바이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함.

김승희 의원실

국민부담·국민혼란·국민불신만 낳고 있는 문재인 정부

주요내용

[복지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겠다던 文정부, 국민부담만 늘려

- 보장률 0.8% 하락에 대한 추가 재정부담은 더 커지고, 보험료율 인상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국비 법정 지원율도 13%대로 역대 최저이며, 비급여의 예비 급여화도 4.2%에 불과하여 100%까지는 23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재정절감 대책은 오리무중이며,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미비, 약가비 총액제는 아직도 미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결국 문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 12조 재정적자까지 발생될 전망이다.

[복지부·국민연금]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해법은커녕 국민 혼란만 가중시켜

- 법령 위반 -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한 10월 말까지 연금 개편안 제출 의무를 노골적으로 어기겠다고 밝힘.
- 국민연금 사각지대 과다 - 가입 연령 총인구의 45.2%가 사실상 국민연금 받지 못함.
- 헛다리 짚고 있는 연금공단 -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이 더 중요한데, 대책이 없음.
- 국민불신 해소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하여 잠재부채 추계 문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혜택 전무, 국민연금 양극화 국가 조장 문제를 지적함.

[복지부] 문재인 정부와 은행권 간의 은밀한 거래 의혹?

- 지난 5월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최종선정 이전부터 정부 국정과제(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이행을 돕는 사업기획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최종선정 이후에는 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위원회와 1,0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특정 은행이 복지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도우며 정보코드를 맞춰,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사안에 대한 거래 의혹을 제기함.

신상진 의원실

文정부 보건·복지정책 우려 투성이, 국민 걱정 이만저만

주요내용

| 문케어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 지적

- 역대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보험급여비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은 유지되어 왔음. 이에 과대포장되어 있는 문재인 케어의 허구성에 대해 질타

| 공공기관 성과급 재분배 실태 지적

-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직원들 성과급을 1/n하여 재분배하고 있는 실태 지적
- 복지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전수조사,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 할 것 강조

| 사회서비스원 문제점 지적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시대착오적 접근으로 해외에서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담당하다가 90년대 이후 민간으로 이양하는 추세로 전환 중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복지생태계의 붕괴, 노동시장 이분화 우려 등 문제점 제기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불안정 질타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및 고용불안정 발생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또한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대책에 따라 종이컵을 생산하는 장애인시설의 매출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 국민연금공단 코드·보은인사 문제점 제기

- 전문성 부족한 정치인 출신 이사장, 언론인 출신 감사, 코드인사 의혹이 짙은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에 대한 문제점 제기
-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길어지는 사이 기금운용역 퇴사자 증가, 해외투자자 면담 횟수 감소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총체적인 조직 운영 문제점 질타

유재중 의원실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미래세대 부담 가중시키는 정부 질타

주요내용

| 문재인 케어에 따른 국민 재정부담 전가 및 재정 건전성 지적

- 보험료율 3.49% 인상해도 부채비율 높아지고 2023년에는 지급준비금 급격히 감소해 적정 준비금 1.5개월 밑으로 떨어져
- 2026년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8% 도달해, 위험 수준 도달
- 문케어 홍보 위해 31억 예산 전용하고, 예비비까지 써가며 60억이나 편성해

|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서민과 기업 부담 가중

- 국민연금 국내 수익률 1.39%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 국내주식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160% 등 잘못된 투자전략으로 손실 키워
- 연금공단 전주 이전 후 운용역 이탈에 따른 기금운용 어려움으로 3년간 유지해온 목표 초과 수익률 0.25%포인트에서 0.20%포인트로 낮춰
-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 서민과 기업부담 가중시켜 경제 더 위축시킬 것

| 의료·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제안

- 만성적인 혈액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혈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수혈 적정성' 요양기관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야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미지급금 650억에 달하고 지역별 편차도 최대 14배나 되는 등 실효성 적어
- 자동개시 건수 증가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개선 위해 '감정제도'의 전문성 강화해야

윤종필 의원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거짓말 하는 문재인 정부

주요내용

| 저출산과 관련하여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

-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신생아 수 20만 명대로 줄어들. 대통령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두 번 밖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상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분석하여 조목조목 문제점 지적함. (타겟층 선정 부적절-저출산 해결에 제1 타겟층인 미혼남녀에 대한 대책이 없음. 저출산 원인을 찾기 위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부적절, 기존 업무 반복 등)
- 남성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소관기관들의 육아휴직 비율을 조사하여 발표함.

| 국민연금 개혁을 결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

-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고갈시기를 고려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임.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을 주문하고,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 하나의 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을 돌면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즉, 책임을 회피하며 물타기와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것을 촉구함.

| 문케어와 관련하여 거짓말하는 문재인 정부

- 3.20% 인상하겠다고 해놓고 3.49% 인상함.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정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임.
- 급여전환에 따른 로드맵 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잘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타함.
- 국회 예정처 추계 등 다른 외부에서 정부와 다른 추계 결과가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의 재정추계만을 고집하는 문제를 지적함.
- 국고보조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상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부분 밝혀냄.

2018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반시장적 경제정책’의 허구성 규명
- ‘국민외면 정권편향’ 일변도 정책 개선
- ‘현장중심 대안제시’의 정책국감 실현

✓ 평 가

- 文정부 일자리 정책의 민낯을 부각함으로써 국민여론 환기
 - 정부·여당조차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한 단기 일자리(*가짜 일자리)를 악용한 고용지표 조작, 고용세습, 채용 비리 등 적발은 우리 당의 최대 성과로 국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슈 관리 필요
 -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논리적 한계와 경제지표, 자영업자의 입장 등을 활용하여 적극 공세해 정부·여당과 대비하여 확실한 여론 우위를 선점
- 정부·여당의 逆정치공세를 팀워크 및 균형적 시각제시로 반격
 - 국감직전, 환경부장관 교체를 단행하여 노골적인 부실국감을 의도하였으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격 수용하여 발목잡기 논란을 차단하였으며, 당 소속 위원들이 합동 질의서를 준비하여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야 3당의 경과보고서 채택불가 입장 유도
 - 4대강 사업 등 前정부 대형사업에 대한 여당의 정치공세를 정책적 긍정효과를 제시하며 맞대응하여 정권편향적 정책집행의 문제점을 부각
- 현장중심, 민심반영 국감으로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 일신
 - 소상공인, 노동권 사각지대, 직장내 괴롭힘 등의 노동현장 사례를 집중발굴하고, 국감중인 신문을 통해 현장을 목소리를 대변
 - 나아가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수권정당으로써의 위상 정립
- 당소속 의원 국감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부족은 향후 과제
 - 국정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정부의 대북 이슈몰이, 文정부 초기라는 한계 등으로 인해 국감활동 언론보도가 감소한 점은 아쉬운 대목
 - 향후 효율적 이슈관리 및 언론대응 전략에 대한 보강 필요

김학용 의원실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내용

| 모성보호급여 지출 급증에 고용보험기금 고갈위기 지적

-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02년 257억 원에서 '17년 9천356억 원으로 36.4배 증가
- '17년 말 실업급여 적립금 규모는 최소 법정적립금인 9조4천억 원보다 3조6천억 원이 부족한 5조8천억 원에 불과
-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지원 확대를 제안

| 기상청 예보관 기피현상 지적

- 기상청 현직 예보관의 78%가 50대 이상이고 30대는 단 1명뿐
 - 고강도 업무 환경 탓에 기상청 직원들의 예보관 기피현상이 심각
 - 예보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
- 인적보강과 특별보상체계 수립 등 예보관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환경부, 4대강 수계관리기금·석면 피해구제기금 방치 지적

-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3%, 석면 피해구제기금은 0.8%
 - 시중은행의 정기예금(1.51%)보다 낮은 수익률 지적
- 여유자금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법 마련 촉구

| 노동부 산하기관 방만 경영, 무질서·불법 천지 지적

-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가 끝나도 문제가 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감사 실시 의견 제시
 - 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 비리 지적

| '국정감사 후속 조치 4대 입법안' 발의

-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임이자 의원실

공공기관 친인척채용·고용세습, 문정부는 적폐놀이 중

주요내용

| 국민신뢰를 잃어버린 환경설비(KBS보도)

- 국민의 혈세 55억 원을 들인 설비가 4개월이 넘도록 정상가동이 되지 않음.
-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설계·준공한 환경설비가 환경법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시공 및 준공에 이르는 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봄.
-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경부 및 환경공단의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행해야 함.

| 발암물질 ‘크롬’ 못 거른 정수기 1,119대 소비자 품으로(TV조선 보도)

- 크롬은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 크롬 제거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거짓·과대광고를 함.
- 먹는물관리법 제47조, 정수기의 거짓·과대 광고 시 압류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발현황을 관리하지도 않음.

| 보조출연자·캐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KBS, SBS 보도)

- 보조출연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성폭력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보호 방안 또한 미흡함. 먼저 실태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함.
- 캐디의 경우, 고객의 성희롱도 심각하지만 골프장 측의 성희롱, 갑질도 매우 심각한 수준. 희롱예방 교육은 물론, 강력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함.

| 엉망진창 소득주도성장, 국민의 아우성 안 들리나

-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노동시장 직접 개입 등으로 인해 경제가 망가지고 있음.

| 검정원 인원 인력공단 정규직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와 판박이

- 인력공단의 정규직 채용자 68명 중 친인척이 6명으로 드러남.

강효상 의원실

소득주도성장 허상 부각, 불공정 기관선정 의혹 제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요내용

| 홍장표 前 수석 소환해, 정교한 논리로 소득주도성장 실패 부각

- 홍장표 前 경제수석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현 정부의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을 파헤치고, 대한민국을 좌파 경제이론의 실험대로 만든 청와대와 고용 당국을 질타함.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고, 지역별·업종별·연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20년 최저임금 동결 등 해결방안을 제시함.

| 환노위 소속 및 산하기관 '가짜 단기 일자리'만 2천 개 이상인 것 밝혀내

- 정부가 최악의 고용참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2개월짜리 초단기 일자리를 만들며 일자리 분식(粉飾)에 나서고 있음을 찾아냄.
- 고용노동부 산하는 근로복지공단 청년인턴 1,200명, 한국산업인력공단 108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명 등으로 집계됨. 환경부 산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700명, 한국환경공단 130명 등으로 환노위 소속 기관만 2천 명이 넘음.

|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의혹 제기해 감사원 감사 촉구

- 근거도, 기록도 없이 평가 당일 채점방식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관리번호란 미기재 및 그에 따른 감점이 없었음을 지적해 국정감사에서 시인받음.
-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 요청 및 필요시 검찰 수사 촉구
- 대구지역 주요 신문 이틀 연속 1면 톱 게재 등 지역 신문방송 크게 보도

| 낙동강 상류 오염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불감증 질타

- 이강인 (주)영풍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18. 2. 24일 있었던 중금속 폐수 70톤 무단방류 사고 등 환경오염 책임을 추궁함.
- 조업 정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고용·생계 등 경제적 피해배상 약속도 이끌어 냄.

| 250만 대구시민의 염원인 대구취수원 이전 필요성 역설

- 대구취수원 이전은 무방류시스템과 별개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무방류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함.

문진국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 및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문제

주요내용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의 잘못된 사업설계와 운영부실 문제

-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50%정도 수준이며, 당초 잘못된 예산추계로 상당 부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된 예산도 안정자금이 가장 필요한 5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음.
- 정부 예상과 달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10차례 이상 지침을 변경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킴.
-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홍보 미비로 신청자들의 지급요건 문의 및 업무처리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음.

| 성과 낮은 일자리 사업에 예산만 퍼붓는 문제

- 고용유지율,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23조)로 편성
- 고용부의 유명무실한 관리감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최근 3년간 총 981억 원에 달함.

| 굵을 대로 굵은 문제투성이 올바로시스템

- 올바로시스템 고객지원센터의 상담 건수 급증하지만 상담 인력은 변동이 없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스템 노후화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자, 연계정보 증가 등으로 악성 민원도 꾸준히 발생
- 2017년 건설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중 가장 먼저 '계량값 자동전송'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기로 입력하여 시스템에 전송하고 있음.
- 올바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분류번호가 올해부터 263개에서 279개로 변경되었으나, 상당수가 인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개정 전 분류번호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류연계정보도 증가(13년 71만 1천 건→17년 110만 1천 건)추세에 있음.
- 이에 환경부에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충 및 인력 충원 등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이장우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新고용세습'... 전수조사 통한 진상규명 절실 ·환경부 위에 '환경단체'... 국가주요 환경정책 편향성 우려

주요내용

! '고용세습' 잔치에 수수방관만 하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하 기관 친인척 고용현황 제대로 된 전수조사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해야

- 고용노동부 산하 11개 기관 중 근로복지공단과 학교법인 폴리텍이 해당된다고 답변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에서 발견
-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한 문재인 정권 친노동 정책이 빚은 신종 '新고용세습'.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다가 현 정권 최강 강성 민노총의 정치적 파위가 얹힌 '신 일자리 적폐'
- 강성 노총 눈치 보기 급급한 무책임한 고용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양 공사 통합('17.5.31.) 이후 사업장 근로감독 단 한 차례도 없음.
- 사태 발생 이후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친인척 우선 특별채용 관련 규정이 없고, 현행 노동관계법령 종합 시 지청에서 조치하기에 '한계'라고 변명뿐...노동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무 상실
- 친·인척 고용세습은 물론 본부 공직자 등과의 관련자 등도 추가 전수조사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엄벌해야

!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 환경단체 장악...국가환경정책 좌지우지 우려

- 환경부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총 142명의 위원 구성 중 43명(30%)가 시민단체 소속. 분과별 위원장(6명) 중 3명이 환경운동연합 핵심 간부로 활동...정책 결정의 상대적 편향성 우려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중요 환경정책을 심의하고 자문...중요 환경정책 중립적, 균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하기 어려울 것

2018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의 가족고용세습 채용 비리를 부각하여,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입증함.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만 해도 정부 지시에 따라 LH 등 23개 기관에서 단기 가짜일자리 12,500개를 만들어 낼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무려 378억 원에 달하는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지적 이후 4,600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정부의 가짜일자리 만들기 허구성을 자인한 것임.
-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불법유출'사건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구하기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악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점을 집중 부각하였음.
- 과속하고 있는 남북경협 문제점에 대해 부각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속도 조절과 세부 예산추계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적법절차에 의한 해고자 98명을 코레일 사장 말 한마디로 일괄 복직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특혜채용의 결정판임을 고발하였음.
-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줄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레일과 SR통합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통합문제는 국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평가

-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 5개월간의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 낱알이 파헤치는 데 성공함.
 -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이루어진 가족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단기알바성 가짜일자리 만들기는 통계수치 조작을 위한 매우 불순한 의도임을 입증하였고,
 -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은 폐기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박순자 의원실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주요내용

| (국토부)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 대책 마련해야

-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안전자산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음.
- 2015년 이후 수도권 주택 미분양은 2만 2천호가 해소되는데 비해 지방의 미분양은 2만 3천호가 증가하였으나, 국토부는 공급조절 위주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매입임대 확대 등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 촉구

|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하여 주택공급 확대해야

- 서울지역 주택 가격 폭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및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함.
-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만이 서울 접근성이 확보된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임.
- 이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

| (국토부)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업계 갈등, 국토부가 해소해야

- 카카오의 카풀사업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승차 공유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4차산업혁명 위원회 및 국토부의 미진한 대처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
- 국토부는 일정 시간대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횟수 제한 등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것을 촉구

|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비스는 세계 1위, 정시출발은 중하위

- 인천공항의 항공기 정시 출발율은 세계 글로벌 허브공항 중하위권에 불과
- 제2터미널 개통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지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김포공항에 단거리 노선을 분산시키고 추가 활주로의 조기 건설 추진 촉구

| (코레일) SR통합논의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고민 선행되어야

-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 명목으로 코레일과 SR 통합 추진 중임.
- 철도 자회사 운영은 19대 국회 당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된 것으로 공공성 강화와 함께 코레일의 적자운영 해결 방안 마련해야 함.
- 또한 코레일과 SR의 통합으로 인한 고용 여력 감소 등 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박덕흠 의원실

생활중심·현장밀착형 국감 펼쳐

주요내용

집권 2년 차 문재인 정부 민낯 밝혀

- 부동산 대란 : 서울 아파트 폭등, 부동산 양극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폭탄 등
- 서민·청년층 주거복지 취약
- '취준생 올리는' 친인척·노조 고용 세습 비리
- 고속도로 휴게소 및 KTX 열차 이용 불편사항

충북 및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 '강호축' 균형개발
- KTX 세종역 논란 종식
-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 청주공항 LCC
- 무심천·미호천·달천 등 국가하천승격
- 괴산댐 재발 방지 댐관리일원화
- 대청호 댐 친환경개발

일회성 폭로에 그치지 않고 심도있는 생활중심·현장밀착형 국감 펼쳐

-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거복지·교통편의·고용 정의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문제 제기와 개선책 마련에 초점

-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
- 관계기관의 공감대 이끌어내 대책 마련에 주력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관심 집중

- 추후 법안 및 예산심의에 국감 성과 지속 반영 예정

김상훈 의원실

판문점 선언 관련 철도 비용·SH 고용세습·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모두 잘 모르겠다는 국토교통부 無知 지적

주요내용

| 판문점 선언의 철도·도로 추계 비용 재검토 촉구

- 판문점 선언에 따른 철도·도로 비용에 대해 정부와 예산정책처 간 약 100배 차이 발생 지적
- (정부) 연 4,712억 원 vs (예산정책처) 42조 474억 원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은 해당 사업 비용추계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부 패싱’을 밝혀냄.
-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업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장단기 계획 수립 촉구

|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자 조사 신뢰성 부족 지적

- SH가 실시한 친인척 재직자 조사는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음을 밝혀냄.
-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부서 단위의 취합이었음.
- 또한 SH가 조사 불이행 부서를 방치하고 있어 원인 파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없음을 지적
-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원 청구는 물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적 차당방안 촉구

- 20년 가까이 시행된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해 부정수급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
-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대부분이 과세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환수도 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냄.
-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실효성에 의문 제기 및 사전대책 방안 마련 요구

김석기 의원실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 부정의한 결과 신적폐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 국정운영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 공기업 LH 이용해 '대북 우회 지원' 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북한 노동자 고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이러한 배경으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LH 연해주 산단 조성의 '사업자문', '현지출장', '법률용역'을 맡아 북한 노동자 고용 등 LH의 대북 우회 지원 계획을 사실상 지휘 하였음이 밝혀짐.
-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인 LH를 이용해 '대북 우회 지원'을 시도한 것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임을 지적

공공기관 '고용세습'으로 악용되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공기관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임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 전환 채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함.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토지주택공사 7명,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시설안전공단 3명, SR 3명 등).
- SR의 친인척 채용 3명 중 2명이 경찰 수사 결과 채용 비리로 밝혀진 것과 같이, 친인척 채용의 경우 불공정한 과정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산하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경주 국도 4호선 붕괴'

- 올해 10월 7일 태풍 '콩레이'에 의해 경주 국도 4호선 인근 비탈면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국도 4호선 도로가 형체도 없이 붕괴됨.
- 해당 도로는 16년 국토부에서 정밀검사와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당시 정밀검사는 '수박 겉핥기' 식의 부실검사였으며 보강공사 역시 땀질식 조치였음이 밝혀짐.
- 더욱이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유사 사고 발생 징후가 현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비탈면과 인근 도로 등 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의 철저한 정밀조사 실시와 후속 조치를 요구함.

민경욱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가짜일자리 만들기 행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악용한 채용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주요내용

청와대의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단기 인턴 채용 압박 확인

- 청와대와 기재부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정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10월부터 단기일자리 및 체험형 인턴 채용을 대폭 확대하라고 압력을 행사함.
- 의원실에서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월부터 12월까지 채용했거나 채용할 단기일자리와 체험형 인턴은 1만 2,50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총 372억 7,500만 원에 달했음.
-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1호' 약속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16곳에서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29명을 확인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작년 12월 정규직 전환자 중 직원 친인척이 각각 7명, 19명인 것을 밝혀냈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입증

-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12.58% 올랐고, 이명박 정부(5.86%)나 박근혜 정부(0.69%) 초기 2년과 비교해 압도적인 증가세를 확인했음.
-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9곳의 주택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 상승하며 전부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린벨트 풀어서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함.

건축자재의 라돈 관리기준 없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실태 개선 요구

- 국정감사에서 벽돌·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방출된다는 것을 직접 시연하고 확인함. (JTBC 이규연 스포트라이트 방송)
- 완성된 아파트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규정만 있고, 라돈의 근본적인 원인인 건축자재에 대한 규정과 담당부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함.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토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을 관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함.

박완수 의원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아닌, 적폐양산 사례 국감통해 지적

주요내용

|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전환대상 친인척 채용 및 비상식적인 직고용 대상선정 문제 지적

-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발표 이후, 인천공항 협력업체에서 다수의 친인척 등 비정상적인 채용 발생
- 정부 가이드를 위반한 정규직전환 사례 지적
- 인천공항 직고용 대상 선정과정 원칙 없는 노조와의 졸속합의

| LH, 남북경협 관련 용역 비공개 추진, 시기상조 지적

-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북 경제특구 사업 검토는 청와대, 정부 지시 가능성 지적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서 대북프로젝트 재개 검토 부적절성 지적
- '15년 삼일회계법인 검토 결과,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불확실 결론, 퍼주기식 사업 우려 지적

|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기존노선 일대의 투기의혹 문제지적

- '09년 최초 기본조사 때부터 최근까지 논의된바 없었던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의 급작스러운 노선 변경 사유 등 문제 지적
- 기존노선 일대에서 벌어진 세종시 전원주택시범사업 사업자 선정과정 비상식적(주택개발과 무관한 인터넷 상거래 업체, 기존노선 일대 토지 다량보유)
- 기존 노선 일대 토지 공무원 등 다수 매입 의혹 지적

송석준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에 서울 아파트 가격만 오르고, 상권은 공동화...서울 상가 5군데 중 1곳은 텅텅 비어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인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10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명박 정부는 1년에 3.4건, 박근혜 정부는 1년에 3.3건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1년에 6.7건으로 두 배 이상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국민들이 헷갈림이 날 정도임.
- 정책 방향이 어디로 될지 모르고, 발표된 정책이 며칠 만에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 시장은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정책방향과는 정반대로 흐르면서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만 뛰어

-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만 불러 일으켜
- 지난 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12.58% 올랐음.
- 이것은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시절(9.06%)보다 더 높았으며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 하지만 서울 상권은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가속

- 2018년 2분기 현재 서울 오피스 건물 중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목동으로 23%. 주요 오피스 지역인 종로는 21.4%, 강남대로는 19.9%이었고, 화곡이 19.1%, 충무로가 16.9%, 용산이 15% 순
- 중대형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지역이 이태원의 경우 공실률이 21.6%로 가장 높았고, 논현역이 18.4%, 혜화동이 14.2%, 동대문이 13.9%, 테헤란로가 11.9% 순
- 소규모 상가의 경우는 젊은 세대층에게 핫한 지역인 홍대합정이 공실률이 17.2%에 달했고, 공덕역이 12.8%, 논현역이 9.2%, 압구정역이 6.9%, 서울역이 5.8% 순

이은권 의원실

이은권 의원,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내용

| 10.10(수) -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 文정부의 선부른 부동산공급정책 지적-과도한 부동산정책 규제완화, 교통인프라 확충, SOC 투자 늘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정책 수정해야 함.
- 국토교통부 산하단체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지적-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국토부 산하단체기관이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 및 유흥업소에서 진행하고 법인카드를 결제한 뒤 회의비로 처리

| 10.11(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

- LH 부패적결의 공허한 외침, 특단의 조치와 결단 필요 지적-'18년 2월 직원 뇌물수수혐의 적발, 세종본부 직원들 불법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등 특혜의혹
- 6조 112억 예산 퍼부는 LH조성 국가산단, 분양률은 저조 지적(분양률 30%)

| 10.15(월) -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

- 고속도로 휴게소 과도한 수수료,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전가 지적 -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최고 58.5%로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 지불
- 도로공사의 부채해결 방안 마련시급 지적-연평균 부채증가 4053억, 2017년 말 부채규모 27조 4828억

| 10.16(화) - (충청북도 국정감사)

- 충북방재안전 공무원 부족 지적-충북 13명, 강원도 26명, 충남 26명

| 10.18(목) -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

- 한국감정원의 통계신뢰성 지적-강남 4구 아파트값이 하락했다고 공시, 실제로 실거래가는 1.27% 상승 (정부를 두둔하기 위한 통계 내놔)

| 10.19(금) - (인천국제공항 등 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재부의 압박으로 전례에 없던 대규모 단기일자리 채용 지적(정부의 고용지표 조작 꼼수)

| 10.22(월)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채용 비리 지적-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한 친인척 채용

| 10.24(수) -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

- 비핵화 전제되지 않은 남북철도연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이헌승 의원실

이헌승 위원, 국민에 박탈감만 안겨주는 정부 국토교통 정책 질타

주요내용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국정조사 요구

- 서울시, 특별점검에서 친인척 채용 문제 조사 안 해...문제 방치 의혹
- 향후 정규직 채용규모 축소 가능성 지적

| 인천공항공사, 김영란법 위반 지적에도 항공권 협찬 요구

-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 체결해 최근 3년간 10회 항공권 협찬 받아
- 권익위 법 위반 소지 지적, 해외마케팅 성과도 미흡

| 교통안전공단, 말리부 누수 확인하고도 리콜 조치 안 해

- 제작사 설계 변경 주장만 믿고 누수 문제 해결된 것으로 판단
- 피해자 리콜 외엔 구제 방법 없어, 리콜제도 내실화 촉구

| 고속도로 하자 방치 심각, 부산울산 하자방치율 53.4%로 최다

- 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 뒤에 숨어 하자 발견하고도 최대 10년 방치
- 부산울산선 만화교 대형사고도 중대하자 2013년 발견 후 5년 방치 결과
- 유지관리 책임 구간에 대해 공사에서 1차적 보수책임 져야

|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2밸리 조성해놓고 지방업체 입주 불허

- ‘공업지역 대체지정’ 꿈수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13만 평 확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는 인구유발 효과 1/4 축소해 통과
- 과밀화 조장해놓고 뒤늦게 지방업체 입주·임대 전면 금지, 심각한 차별

이헌재 의원실

2018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주요내용

주요내용

| 27만 명 '핀셋증세'라더니, 내년 47만 명 종부세 낸다.

-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주택 시장안정 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 세수전망을 추계한 결과 2019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에 달하며, 토지 종부세 내는 사람까지 합하면 2019년 종부세 대상 인원은 55만 3,315명에 달함.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도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수도 4조 원대에서 약 7조 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할 것.
-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중산층 대상 증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음.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아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거래세는 과세 균형 측면에서 인하 필요

| 교통인프라 건설 지연 심각, 신도시 교통대책 97% 지연, 4개 중 1개는 '10년 이상' 지연

-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국토부 및 LH)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해할 의무를 지고 있음.
- 법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된 100만㎡ 택지개발지구 89건 중 86건의 교통사업이 지연, 통근 지옥 신도시!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함.
- 더 나아가 주택건설을 숫자 채우기식의 과거 공급대책 방식을 지양하고, 주택 이외 업무시설, 편의시설 및 교통망도 동시 공급해 지나친 서울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병행돼야 함.

| 코레일, 자회사 쥐어짜기 도를 넘었다! 5년간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 269억 원·기여금 명목 6,073억 건어

-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자회사 5곳에서 269억 원의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 거둬들인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과도한 갑질에 해당함. 배당금, 구내영업료, 광고료 등 '그룹 기여수익' 명목으로 거둬들인 비용은 총 6,073억 원으로, 이는 모회사의 월권이자 강탈수준. 자회사의 매출액은 늘어도 철도공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당기순익은 현저히 낮아짐.
- 브랜드 사용료 등 비합리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철도공사의 갑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함진규 의원실

가짜일자리 정책과 고용세습 밝혀내고, 국민 안전 강화

주요내용

| 가짜 일자리 정책과 고용세습 밝히고, 산업활성화와 해외진출로 진짜 일자리 창출제시

- BH와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강제로 압박해 가짜 일자리 추진하고, 문서조작으로 BH지시 은폐기도 밝혀내
-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LX 등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고용세습 만연 밝혀
- 서울교통공사 수익성 악화에도 합격률 93.6%의 7급보 전환시험 지적
- 국내철도산업 정체와 해외진출 부진을 지적하고, 산업육성과 해외진출을 통한 진짜 일자리창출 촉구

|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 지적과 저소득·서민 주거환경 개선요구

- 부동산 정책은 단순 주택공급이 아니라, 교통, 교육, 문화인프라가 병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중앙·지방 유관기관 협의체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작동해야 함을 제안
- 서민·저소득층 위한 임대아파트에 냉방시설과 주차장 등을 통한 주거환경·복지 개선 촉구

| 민생현장 안전저해 요소 찾아내고, 재해·재난 대응능력강화 대안제시

- 기준미달 고속도로 졸음쉼터 175개소 신속한 개선 요구
- 연간 차량결합 의심 신고 6,000여 건 신고 대비 조사 46건 지적 및 외유성 리조트 심사 질타
- 과열 자동차 자동감시시설 확대하고, 단속근거 마련 요구
-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데이터 부처 간 연동·공유 미흡 지적, 부처협업강화 및 적극적 대국민 활용·공개 촉구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와 독도 관광객 안전 강화방안 마련 요구
-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항공안전감독관 증원으로 항공안전역량 강화 요구
- 공항 등 주요시설 재난대비 매뉴얼 미비 지적, 시정 및 재난·재해 대응능력강화 요구
- 2017년 철도운행선로작업 사망사고 지적,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제도개선 등 철도안전강화 촉구

| 현정권의 독선적이고 무분별한 태양광과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비판

- 경북 태양광 민원 277건 분석하여 환경훼손 및 태양광 사업의 부작용 지적
- 신한울3·4호기 취소 따른 6,407억 원 매몰 비용과 지역경제 침체 지적으로, 현 정권의 울진 탈원전 정책 폐해 지적

홍철호 의원실

국토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 서울 집값 잡는데 결국 실패…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하여 서울지역 주택수요 분산시켜야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지난 '09년부터 올해(10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 서울 서초, 서울 내곡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총 409만 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한 후 4만 3100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음.
- 연도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주택지구를 보면, '09년 2개 지구(서울 강남, 서울 서초), '10년 3개 지구(서울 내곡, 서울 세곡2, 서울 향동), '11년 1개 지구(서울 양원), '12년 3개 지구(고덕 강일, 서울 오금, 서울 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409만 6000㎡)의 71%(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 1399호) 5곳(서울 강남, 서울 서초, 수서역세권, 서울 내곡, 서울 세곡2)인 것으로 밝혀졌음.
-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음.
-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 중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음.

2018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 총평

✓ 핵심성과

- 공직사회 성범죄예방교육 매뉴얼 미흡
 - 고용노동부 부실강의 내용 및 강사 자격 관련 사항 지적
-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필요성
 - 허술한 아이돌봄 자격 취득 문제
- 성평등위원회 등 여성권익 위원회 활동 강화
 - 대통령 공약 실천 중요성 제기
- 게임중독 관련 중대 범죄(강서구 PC방살인사건) 대응
 - 게임 중독과 중요 범죄 발생 상관성 제기
- 동성애 관련 성 질병 대책 수립
 - 에이즈 등 중요 성 질병 발생 관계성 제기
- 성범죄 대응 관련
 - 성범죄 알림이 서비스 제도 개선 등
- 공공기관 성범죄 피해자 관련 대책 수립
 - 성범죄예방교육 현황 파악 등
- 청소년 관련 정책 지원 강구
 - 청소년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등 근로환경 개선

✓ 평가

- 여성가족부의 안이한 여성 관련 정책 추진 문제점 및 향후 제도 개선 대책 강구
-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복에 대한 역할(타 부처와 비교) 제고 및 장관 역량 강화 필요성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관련 성범죄 대응 체계 마련 시급성 문제 제기
-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현 정책 강화 및 사회적 분위기 고양 대책 수립 제기
- 게임중독 등 사회문제 대처 시스템 구축 문제 등 정책적 대안 유도
- 경력단절 여성 및 청소년 지원정책 강구 필요성
- 여성가족부 부실한 자료 제출 등 국감 준비 부족
- 여당 의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 식 맹탕 국감 논란 대두

2018 국정감사 백서

발 행 일	2018. 11
발 행 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편집·인쇄	디엔시파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본청 233호

02) 6288-0200

홈페이지 : www.libertykoreaparty.kr